

복 지 정 책 과 복 지 현 장 의 브 리 지

보지저널

May 2021 VOL.153



다문화 가족,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이루자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뷰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가족 단위 야외활동, 집집마다 오월 행복 증진

5월 가정의 달 행동수칙

가

가족과 함께,

동거 가족끼리의 활동을 권합니다.
직계가족도 8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가

가까운 장소에서,

짧은 시간에 다녀올 수 있는
가까운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시간을 줄이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

호젓한 시간대에,

미리 계획을 세워 한산한 때에 한산한 곳으로
다녀오는 것을 권합니다.

화

호화로운 오월, 차분하고 건강하게.

자연과 함께 오월을 지내고,
소중한 사람들과는 예방접종 후에 만납니다.
주위 60세 이상 어르신, 지인의 예방접종을 챙기며
차분하고 건강하게 지냅니다.

나의 경험을 사회적 가치로 기업퇴직자 사회공헌 뉴스타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상우리가
기업의 퇴직(예정)자들이 맞춤형 이론교육과 생생한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진출하거나 경험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20년도 154명 수료, 103명 일자리 연계(연계율 66.9%)

참여대상

기업 퇴직(예정)자의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 내지 창업 지원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

모집인원

교육 기수당 30명 내외 선발

모집기간

5월 14일~5월 30일(뉴스타트 9기생)
20년도 1기~6기 운영 / 21년도 7기~14기 운영 예정

지원내용

4주간(총 60시간)의 기본교육 및 현장실습, 창업 및 창작 활동
※교육비 일체 무료

참여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02-2077-3951)
(주)상상우리 커리어콘텐츠팀(02-6388-7939)





04

커버스토리

Cover Story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 다문화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기고
다문화 가족,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이루자 **04**

좌담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필요하다 **10**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 지원 프로젝트 '다재다능' **18**



10

정책&이슈

Policy&Issue

기고 “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20**

자원봉사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의 역할은? **26**

장애인구 고령화 심화...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 **28**

기고 장애인에 대한 미세한 차별과 그 심각성에 대하여 **30**

통계로 보는 복지
신혼부부 통계로 본 혼인 후 5년간 변화는? **34**

현장

Field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 평가 결과 '평균 87.4점' **36**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에 헌신한 '좋은이웃들' 한자리에 **38**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방향은? **40**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을 가다
한국중부발전 **42**

나는 '사회복지사'다 **44**

42



인물

People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46**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50**

세계

world

일본
고독사 문제 확산 **54**

네덜란드
평균수명 연장과 연금제도 **58**

독일
노인 주거형태와 지원 정책 **62**

문화

Culture

인문학 산책
장자의 죽음 **66**

방구석 영화여행
'최악의 하루' 그 끝은 해피엔딩? **70**

뉴스, 신간 **74**



70

발행일
2021년 5월 1일

발행인
서상목

편집인
김홍중

편집장
전우일

취재
곽대경 이성우 한유미

편집자문위원장
황진수

편집자문위원
김현훈 변용찬 손수호 오단이 이길형 임은희

기사제보
02-2077-3999

구독신청·광고문의
02-2077-3931

발행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우 04195)
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www.bokjitimes.com

등록번호
마포 라00204

창간
2008년 8월 1일

디자인·인쇄
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값 6,000원

1년 정기 구독료
72,00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인쇄물의 본문 오른쪽 위부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출력용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리더기를 이용하여 본문 내용을 음성출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 이루자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를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인’ 등 특정한 부류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의미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이념’을 논의하기보다는 ‘차별’과 ‘구분 짓기’ 등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이주배경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9년 기준 2억2700만명, 세계 인구 3.5%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국이 아닌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IOM, 2020). 우리나라도 국내 총 인구에서 이주민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 체류 이주민 인구는 2011년 140만명에서 2019년 25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4.87%에 이른다. 2021년 3월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한 이주 제한으로 인해 200만명 정도 규모로 4.25%까지 다소 하강 곡선을 나타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그러나 향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다소 진정세로 들어간다면 국외적으로 향상된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요인과 함께 국내 저출생 및 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2020)은 2040년에는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에서는 이주민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양적 측면에서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한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이주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거주하며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고,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받으며 공존할 수 있는 사회·문화·제도·정서적인 인

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필요로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다차원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속도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한 제도적·사회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를 거쳐 도출되기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정책적 요구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국적법을 개정하고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제정했다.

문화의 다양성 인정하고 차이 존중해야

2006년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선언하게 된다. 이후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 제정 등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나, 전통적인 서구 이민 국가들의 이주 현상과는 달리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문화 관련 용어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다문화주의, 다문화 사회 등으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이보다 앞선 2003년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기존에 사용된 혼혈아, 이중문화가족, 국제결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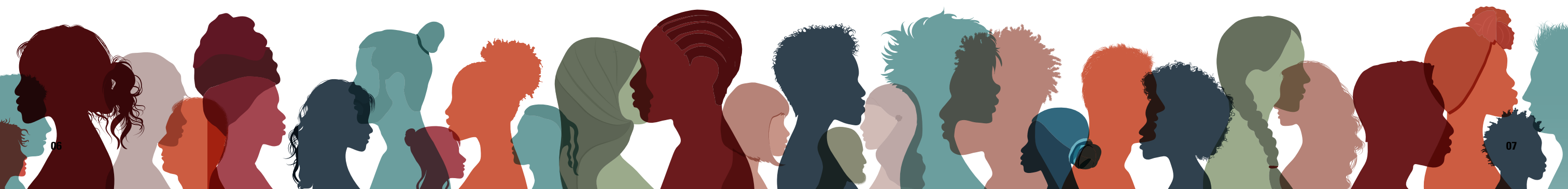
‘다문화주의’는 종족, 인종, 언어에 기반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포용, 응집, 통합의 관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차별적인 용어를 대신하여 ‘다문화 가족’으로 대체를 권장하며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동포, 새터민 등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다문화 가족에 대한 법적 개념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 짓고 있어 그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를 ‘다문화 가족’이나 ‘다문화인’ 등으로 특정한 부류나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를 구분하거나 한국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다문화주의가 의미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이념’을 논의하기보다는 ‘차별’과 ‘구분 짓기’ 등 반다문화주의 정서를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는 종족, 인종, 언어에 기반한 문화의 다

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의 차이를 존중하고 공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합’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포용, 응집, 통합의 관점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포용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제도를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응집으로서의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가진 태도와 규범적 특징에 의해 상호 관계가 응집된 상태를 의미한다. 통합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이 다문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이주민이 사회의 소수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으로 인해 사회가 다양하고 조화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통합, 언어교육과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사회·문화적 통합, 이주민의 선거권 및 사회복지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시민권·사회권적 통합이 이뤄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동화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 가족이나 이주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할 수 있는 규정이나 사회참여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 진





정한 사회통합의 의미가 존재하는지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펼쳐야

먼저, 한정적인 정책 대상 측면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다문화 가족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의미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국적취득이 가능한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국적 취득을 통해 국민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비중이 높을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으로 볼 때,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 가족, 국적이 한국인인 혼혈인 가족은 다문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즉, 한국 국적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 중심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서 포용해야 할 다양한 이주민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대상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이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이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가족 중심으로 규정하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정책 기준과 내용 측면이다. 결혼이민자와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의 내용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문화 정책이 동화정책이나 차별주의에서 벗



어나 성숙한 다문화주의로 나아가는데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보다는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욕구와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주 및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경우 직업과 의료서비스, 경제적인 취업, 정치적 권리 확보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짧은 시간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일상생활 적응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길 원하는 욕구가 높을 것이다. 물론 다문화 가족에서 다양한 이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일반 정주민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을 고려해볼 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마련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정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정책의 전달 체계 측면이다. 다문화 정책들은 다른 부처의 외국인 정책과 중복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 정책과는 목적이 달라 정책 시행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정책의 전달 체계가 분산되거나 지역이나 서비스에 따른 격차가 심해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제 활성화 지원과 인재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과 자녀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자들을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이주자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주류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쌍방향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민 대

다문화 정책은 단일 부서에서만 진행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양한 부서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합하고,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 체계와 관련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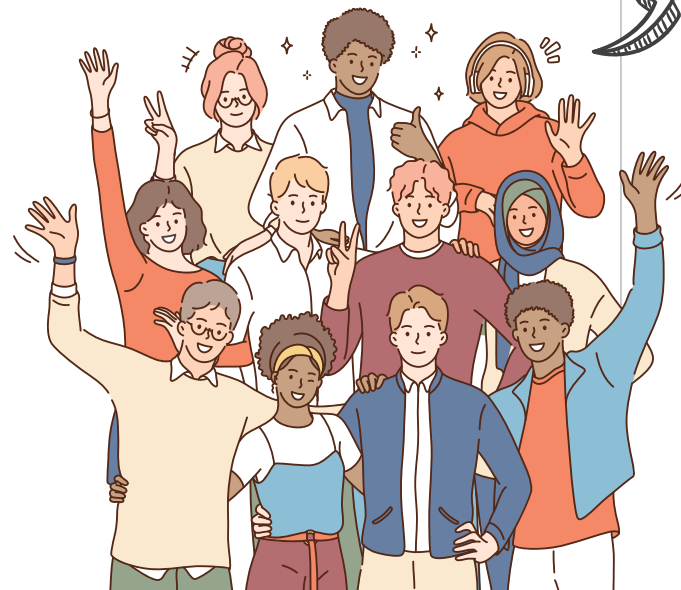
상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은 단일 부서에서만 진행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다양한 부서의 참여와 조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합하고,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 체계와 관련 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 수용하는 국민들의 인식변화 필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많은 국민들이 다문화 사회

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종차별, 편견, 문화 다양성 수용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주민들도 한국인들의 차별과 사회적 거리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을 차별하는 사회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과 다른 문화들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교육과 다문화 수용성 등이 지속적으로 밑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뿐만 아니라 가족 및 생애 주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이주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과정을 통해 다문화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벗어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민·사회·문화적인 통합과 함께 경제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①



참고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 2021년 3월호 통계월보. 법무부.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2020.
「2020 세계이주보고서」

다문화 가족, 사회통합 필요하다

●●●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사회 다문화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다문화 수용성을 개선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 ____ 2019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2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7%에 이른다. 이중 다문화가구 구성원은 약 106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다문화 수용성은 어느 정도로 진단하는가? 또 수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박민정 ____ 보편적으로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체류 자격을 제외하고는 가족동반이나 초청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외국인 가족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도 복지적 관점의 사회통합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3년 주기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수치를 보면 다문화 수용성은 100점 만점에 52.81점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다문화 수용성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언론이라 볼 수 있는데, 이주민에 대한 언론의 경향이 보수적이고, 난민 이슈 등 안 좋은 이야기가 보도되면서 거부나 회피의 정서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같은 수용성 문제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인식개선 교육이나 언론 홍보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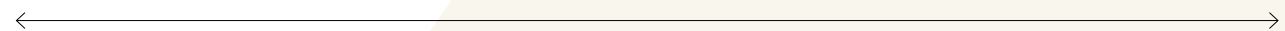
사회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경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종은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座談

서울시에서 매년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하는데, 거주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체류 자격을 막론하고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문제였다.



때 있어 가족 간 대화가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외국인 주민의 경우 본인들이 정착해서 아이들을 중간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만 해도 편입이 잘 되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바로 편입이 어렵다. 필요한 서류도 많아 준비하기까지 몇 년 걸리는 경우도 있다.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중학생 이상이면 적응이 어렵거나 자기 나이보다 학력을 낮춰서 가야 한다. 이렇게 두 가정의 문제가 다른 것 같다.

사회 _____ 행정기관, 가족, 교육기관에서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구축, 구조 개선, 의사소통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겪는 일상적 차별과 소외 문제가 심각하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해 달라.

박민정 _____ 2020년 말 발표된 이민자통합정책지수에 따르면 8개의 영역 중 반차별 영역의 순위가 가장 낮았다. 52개 국가 중 41위였다. 총점에 있어서는 18위인 것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정책이나 제도가 갖춰진 것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감정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규모가 258만명이 되는 2018년부터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법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체류 외국인은 2019년 250

만명을 넘어섰고 귀화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에도 불구하고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익광고 등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흡연이나 장애인에 대한 공익광고, 코로나19에 대한 홍보 포스터 등이 국민의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했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양경은 _____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정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이 인식 개선에 있어 시기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구 집단을 포용하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배경 사회 구성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성격은 대부분 결핍 모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결핍을 메우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런데 이 모델은 결핍을 메우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는 기능을 한다. 차별과 소외 문제를 줄이고자 한다면 결핍 모델 관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대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강점에 초점을 두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적 자원으로, 문화적 자원으로, 연결고리로서 중요한 주체로 인정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일상적 차별과 소외를 해결해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양경은 _____ 다문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태도는 제자리걸음인 것 같다. 온·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 비판적 여론을 보더라도 다문화 수용성 정도가 낮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듯 정부에서도 2018년 제3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에서 전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핵심 정책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제1·2차 기본계획이 국내 거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초기 적응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비이주민의 태도 변화로 정책 방향이 선회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데, 미디어 속에 재현된 이주민의 모습은 일정한 틀 속에 맞춰 이야기가 재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문화적 다양성을 부각하는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종운 _____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도 수용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구로구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구로구는 다문화 가족보다는 외국인 주민, 특히 중국계 외국인 주민이 많은데 이들이 느끼는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외국인 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과 장기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사회적 거리감을 오히려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다. 한국인이 외국인 주민에게 느끼는 거리감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수용하고 살겠다’가 40%였으며, ‘결혼을 통해 수용하겠다’는 6% 수준에 그쳤고 ‘잠시 머물다가 가면 좋겠다’가 20%나 됐다. 같이 밀집해 접촉해서 살수록 이해관계 등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낮아지는 것 같다.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수용도를 높이고 같이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사회 _____ ‘한국인이 보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보는 한국인’의 차이를 분석해 방안을 제시하면 다문화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다문화 가족은 언어·문화

뿐만 아니라 다층적 어려움에 노출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박민정 _____ 서울시에서 매년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도시정책지표조사’를 실시하는데, 거주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체류 자격을 막론하고 ‘공공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문제였다. 이민선발국가를 보면 행정기관뿐 아니라 병원·도서관 등의 편의시설도 다국어로 통번역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반면 우리는 그러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해당 공무원들도 이주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결합돼 이러한 불편이 야기되는 것 같다. 결국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양경은 _____ 언어·문화적 어려움 등 겉으로 드러나는 어려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다. 개인의 한국어 실력, 문화적 결핍 등은 시간을 두고 개선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사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다. 진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한국인은 다문화에 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한국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모순된 인식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 등도 높고 낮음의 피상적인 수준 정도로만 이야기하지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연결해서 이해하지는 않는다. 조금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별도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종운 _____ 가족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 가족의 어려움이 다르다. 일반화의 우려는 있지만 초창기에 한국으로 와 장기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아이는 어휘가 발달하는데 엄마는 정체



정종운
국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경은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종운 _____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제력이 있거나 아이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차별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즉,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는 시각 자체를 경제력이나 학력·능력기준으로 파악하면서 그에 따라 차별도 이루어진다고 본다. 학교 교육으로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람을 대하는 우리들의 인성 등을 성찰할 수 있도록 언론이나 미디어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사회 _____ 미디어에서 강점 관점으로 성공사례를 많이 알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을 물질 기준이 아닌 인성 중심으로 방향을 모색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최근 '다문화'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박민정 _____ 현실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다문화가족기본계획이 존재하고 이에 근거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 아동, 다문화 가족 청소년보다는 '이주배경 아동', '이주배경 청소년'이

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우선, '배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백그라운드에 '이주'가 포함되었다는 것 외에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쉽다. 둘째, 다문화 가족 아동이나 청소년 외에도 외국 국적 동포,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의 아동·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 '다문화'가 구분 짓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주배경'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양경은 _____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문화'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특정 인구 집단을 지칭하는 명사로 통용되어 오고 있다. 다문화는 문화적 포용과 문화적 공생, 화합, 통합과 같은 정책적 철학이자 사회의 비전을 지칭하는 용어이지, 특정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런데 잘못 사용함으로써 한국인들로 하여금 다문화의 본질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커다란 대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좀 더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이주배경'이라는 표현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 중도입국자녀,

중도 청소년, 이주배경 아동 등 용어가 부처마다 다른데, 중앙정부 단위에서 용어 정리가 이루어져야 일선기관에서 혼선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정종운 _____ 이주배경이라는 용어에는 동의하지만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이주배경 안에서도 또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을 넓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

사회 _____ 4년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하면서 이 부분으로 고민이 많았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단일민족을 강조하다 보니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범주화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가족지원센터'라고 하면 좋겠다. 다음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평가해 달라. 또, 다문화 가족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 간 협조체계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의견을 말해 달라.

박민정 _____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의 국민이 인지하고 있고 전국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재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기관이라는 것이다. 각각의 센터에서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다문화 가족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능에 있어서는 결혼이민자와 아동에 대한 초기 적응에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사례관리사업이나 상담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대상이 법적으로 규정된 다문화 가족, 즉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새터민을 제외하고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정책적 협조와 관련해서는 결혼이민자 외의 다양한 가족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하고 싶다. 보다 다양한 이주민, 보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이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양경은 _____ 최근 중앙정부 주도의 관 주도에서 지방정부, 혹은 시민사회로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거버넌스'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 중에 있다. 문제는 다문화 관련 서비스가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적·파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외에도 지역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로부터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내 기관들은 사업 중복 및 서비스 분절성 문제에 직면할 소지가 높다. 기관 간 연계 활동이 지속성 있게 담보되기 위해서는 연계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연계 활동을 전담하는 중추 조직도 필요하다. 시도 단위에서 정책의 방향과 가치,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일을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종운 _____ 센터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초기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과 기능은 잘 해왔

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필요에 맞춰 적절하게 따라가고 있다. 다만, 결혼이민자는 줄고 있고 외국인 주민과 그 가족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한계다.

사회 _____ 해외 각국의 다문화 가족 포용 정책 중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박민정 _____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지역 이름을 활용해 'I amsterdam'이라는 별칭을 만들어 모두가 암스테르담의 소속임을 강조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외국인이 나와 있고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다. 웰컴 키트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웰컴 키트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다 보니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서울 중심인 경우가 많다. 지역 정부에서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이주민을 위한 안내서 등을 제작한다면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통합되

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일본 가와사키시의 경우 많은 국내 다문화연구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흡수돼 현재 일본의 이주민 정책을 만드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해 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 확대해 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양경은 _____ 미국의 '프로미스 네이버후드 프로그램'을 한국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교육적 성과 향상'이라는 공동의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단위의 개입을 시도한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만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사업을 적용해 국내 이주민 밀집 지역 단위의 사업을 구상한다면 '다문화,' '이주배경'이라는 특수성에

만 초점을 두기보다 '아동의 발달'이라는 보편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 인구학적 구성 등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관 단위의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 내의 자원이 서로 유동적으로 활용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정종운 _____ 구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년 5월부터 프로미스 네이버후드 사업을 적용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마을활동가, 공부방 운영자 등 8명을 모집하고 초등학교에서 중도입국 아동 7명을 소개받아 매칭하고 있다. 그 결과 언어적 한계는 있지만 아이에게 학습 지도도 해주고 부모에게는 동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모델을 조금 더 지역에 맞게 적용해 사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사회 _____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다면?

박민정 _____ 2007년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이 되면서 사회통합 관점이 도입됐지만 지금까지는 통합이 피상적으로 논의됐던 것 같다. 이제는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너무 좁은 의미의 다문화 가족에만 한정 짓지 말고 다양한 체류 자격의 가족으로 확대해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배경을 가진 가족에 대한 처우를 고려했으면 좋겠다. 또 인식 개선 교육이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정부나 한두 기관이 노력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양경은 _____ 다문화 정책의 지향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도적 차원에서 성숙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깊은 철

학적 고민과 면밀한 성찰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에서 발달한 다문화주의를 급하게 차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 정책이 지닌 협소함을 인지하는 것이 해결의 첫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다양한 이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으로서의 방향 재설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이주민의 유형도 다각화될 것이므로 지금의 협소한 프레임을 넘어서서 다문화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이민자 집단을 조금 더 포괄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종운 _____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면서 '사회통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앙부처의 필요에 의해 답다운 식으로 하다 보니 피상적인 교육에 머물고 진전은 안 되는 것 같다. 가령 세계시민교육은 어떤 가치를 주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다. 빈곤, 인종, 경제적 평등의 문제는 우리도 그 대상인데 마치 그 사람들을 위해 교육적인 것을 제공하면 되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같은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저절로 올라오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사회통합이 정책 따로, 사람들의 인식 따로 등 제각각인 것 같다. 지역 내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안에서 통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내국인과 외국인, 다문화 가족이 접촉할 수 있는 고리들이 현실에서 많이 생기면 좋겠다.

사회 _____ 사회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이야기해 줬는데, 공통된 의견은 이들을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 녹아들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정책·제도적으로나 학술 단체, 실천 현장 등 우리 사회 각계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좌담이 사회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클 객대경 기자 사진 강민구





1, 2.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 중인 미술놀이반과 아이돌댄스반 동아리 활동 모습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 지원 프로젝트

퇴직교사 재능기부로
학습지도·또래 교류 통해 사회성 발달 도와



경남 사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을 돕고 사회성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성장 지원 사업 '다재다능'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편견 없이 세상을 마주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재다능은 2016년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부모 자녀 간 관계 향상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 기초학습지도, 사회성 발달, 미래 설계, 부모 자녀 관계 향상의 4개 영역, 9개 프로그램을 연간 500회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및 비 다문화 가족 학령기 자녀와 부모,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중 다문화 가족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2016년 사업 초기부터 진행해 온 기초학습지도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등 퇴직교사를 비롯해 전문가격을 갖춘 학습지도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주2회 가정을 방문해 한글 및 독서지도 등을 진행한다.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기초한글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학습지도뿐 아니라 예술지도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 중이다.

사회성 발달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총 8회기로 미술놀이반, 아이돌댄스반, 유튜브크리에이터반 등을 운영 중이고, 푸드테라피 등의 활동을 하는 놀이치료도 4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함으로써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등과 연계해 미디어 감독 체험, 배우 체험, 청소년지도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업체험 균을 더욱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많은 다문화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 자녀 관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놀이치료 자녀 중 위기 자녀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관계 회복을 돕는다. 또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강사를 초빙해 지역 학교를 분석, 중·고등학교 입학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 기반 마련

2018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10여 명이 참여해 '우리의 마음을 그려요'라는 이름으로 창작 뮤지컬을 만들었다. 재능이 없는 평범한 아이들로 구

성돼 완성도 면에서는 미흡했지만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직접 물어보고 그림 또는 발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하면서 대본과 노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특별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공연함으로써 나눔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도 됐다. 2018년 창작 뮤지컬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다문화가정 자녀 인형극으로, 2020년에는 다문화 가족 인형극으로 발전했다.

물론 사업 진행에 있어 어려움도 따른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출결관리와 차량 운행에 담당자의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워져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전환하고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등 사업 운영에 차질도 있었다.

특히 또래 또는 친구끼리 모여 활동하는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유지가 어려웠다. 이에 실시간 화상교육을 통해 친구들과 만나 일과를 나누고 주제를 정해 토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소통과 교류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다재다능은 지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을 활용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재능기부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 같은 결실은 지난해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2020 우수사업 경진대회' 대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변화' 이끄는 프로그램 기획할 것

앞으로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영유아기 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집중돼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환으로 올해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에 '세상 모든 가족 청소년 서포터즈'를 새롭게



3



4



5

3. 퇴직 교사의 재능기부로 운영 중인 기초학습지도 진행 모습
4. 사회성 발달을 위한 놀이치료 진행 모습
5.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기초한글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
6. 미래 설계 프로그램 '미디어 감독 체험' 모습



6

기획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가족 인식 개선'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 개인 SNS에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5월 8일 청소년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을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매년 변화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글 권대경 기자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기부금품법, 어떤 법인가?

2020년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의회 입법안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연달아 발의돼 2021년 4월 말 현재까지 총 20개의 안건이 제출됐다. 지난해 발생한 정의연 사건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입법안들은 공익단체의 모금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깔고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감독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기초를 유지한다.

기부금품법은 행정안전부 소관법이다. 모금하는 주체들이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모집 등록하고 모금활동과 기부금 사용의 감독을 받도록 요구한다. 원칙적으로 모금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한다. 결핵예방법, 재해구호법, 국가보훈법, 식품기부법, 문화예술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에서 정한 몇몇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다. 이들을 제외해도 그 적용범위가 매우 폭넓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불법모금을 하다가 처벌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 아는 이들이 많지 않고, 막상 법을 따르려 해도 내용이 너무 애매하

고 복잡해 준용하기도 어렵다. 도대체 이 법이 언제부터 있었냐고 더러 묻기도 한다. 평생 사회복지사업을 해왔지만 이런 애길 들어본 적이 없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고도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기부금품법의 예외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모금을 하는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기관, 시설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기부금품법의 역사는 길다. 최근 연구¹들은 법의 역사를 세 구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금지법 시기(1951.11.~1995.12.), 규제법 시기(1995.12.~2006.3.), 사용법 시기(2006.3.~현재) 등이다. 1951년 11월 시작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1995년 12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바뀔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한국전쟁 후 사회와 국가 재정의 궁핍, 각종 세금의 증액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생활 꺾임, 멸공 구국의 미명으로 모금 부작용 증가 등의 상황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모금활동을 금지한 것이다. 한편, 경제발전과 88올림픽 개최 등으로 사회 환경이 바뀌고 국내외 공익 자선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기부금품 모집을 계속 금지할 수



만은 없어 1995년 12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허가제를 도입했다. 대신 허가대상을 구호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및 국민 참여가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했고 모집 완료 시와 기부금 사용 시에는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모집을 막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 규제법은 한자 표기가 많아 이해와 적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2006년 3월에는 그 명칭과 내용을 알기 쉽게 한글화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이때 모집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국가 또는 지자체 출연 법인의 모집을 제한하며, 한동안 지나치게 낮추었던 모집비용 부담비율을 다소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금을 규제하는 것 자체를 바꾸지는 않았다.²

그동안 문제 되지 않았던 기부금품법, 왜 지금 문제가 될까?

1995년까지 금지된 행위로 묶여 억제됐던 모금이 허용된 후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 기부금 세금감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의 기부가 증가

했고, 비영리단체들의 미디어 모금활동, 금융기술 변화 등이 더해졌다고 보인다. 모금은 양적·질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미디어와 모바일, 핀테크 기술 등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모금 주체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문화도 싹트기 시작했다. 기부금 세금감면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도부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서서히 기부금단체 관리,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공시시스템 도입과 강화 등으로 공익법인과 기부금 사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부금품법은 (2006년 법의 목적을 기부 활성화 추구로 바꾸기는 했지만) 크게 바뀌지 않았고 모금은 여전히 규제할 행위였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서 기부 사건이 몇 개 터지고 투명성 이슈가 제기되자 갑자기 규제를 높여야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리해 보면, 2000년 이후 공익 모금 활동의 증가와 다변화 속도에 비해 법 제도의 현실화 속도는 느리고 부처별 차등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제도와 현실 간에 괴리가 생긴 것이다. 이런 복잡한 배경 탓에 법의 변천 흐름을 모르고 법 문구만을 읽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다.

이 법은 록 집어 말하기 어려운 묘한 구석이 있다. 모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모금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기초로 사례 해석을 해야만 한다. 문제는,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례분석 자료나 기타 보조적인 안내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을 따라가 보면 법률

1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 연구: 금지에서 규제, 규제완화에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정진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9권 제2호 2017. 8. pp.377-400)
2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사례 분석(박훈,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2012)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할 때 반드시 온라인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이나 기부금 사용이 끝나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며, 모집 계획과 상황이 바뀌면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기부금을 사용하거나 기부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상 용어와 개념의 모호함이 있다. 언뜻 보면 법 문구는 명확해 보인다. 법의 주된 내용은 모집 등록이다. 모금 주체가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할 때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시 제출한 모집 계획, 결과, 기부금 사용까지 관리 감독하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모집 등록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모집 등록에 대해 공익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그럼, 지금 내가 하는 모금이 모집 등록 대상인가'이다. 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1000만원 이상 반대급부 없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을 요구한다. 이에 해당되어 등록된 기부금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전체 기부금의 10% 미만 수준이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총기부금 중 90%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이 아니거나 또는 누락된다. 한편, 주무관청에서는 모집 등록을 받을 때 (사의적으로) 요건을 엄중히 따져 가려 받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은 아예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쉽게 말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예 등록받지 않겠다는 판단이다. 결국 대부분 기부사고는 미등록 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미등록한 모금은 주무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등록이 반려된 자가 불법모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한편, 등록이 된 모금들은 주무관청의 검사를 받게 되고, 잘못된 경중을 따져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린다.

대부분 복지관과 시설들은 일부 사업비 마련을 위해 모금을 한다. 만약, 기관 홈페이지에 후원계좌를 노출하고 복지관 이용자, 주변 상가, 지인들에게 후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연간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이 복지관은 모집 등록을 해야 할까, 안 해도 될까.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후원계좌를 노출했으니 등록해야 할까, 아니면 후원자의 자발적 입금이니 안 해도 될까. 몇 년 전 주무관청은 홈페이지 계좌 노출 행위는 모집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었다가 최근에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다. 몇 년 전 홈페이지 계좌 노출이 모집 등록 대상이라고 들은 기관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등록하지만, 최근 바뀐 해석을 들은 기관은 모집 등록을 안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모집 등록 대상이면서 등록을 안 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다. 같은 행위인데 담당자의 해석이 달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까. 결국 감독의 내용이 고무줄처럼 되어버린다. 참 이상한 제도가 아닌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지난해 이후 상황이 달라져서 등록된 대상을 전수조사하기 시작했고 법 개정을 통해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기부금품법의 해석과 적용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상황을 안고 있다. 모금을 위한 바자회, 걷기대회와 등반대회, 일일주점이나 만찬회, 온라인 모금과 크라우드펀딩, 기업후원, 기업고객과 합

계하는 캠페인, 정기후원 모집 등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무 데도 없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모집 등록 대상이 법에 명시되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자 해석이 필수다. 그러니 담당자의 공익 업무 이해도에 따라서 판단이 갈리고, 모집 등록 상담을 할 때마다 담당자의 결정이 오락가락하고, 새롭게 전보된 담당자가 현장 검사를 하면 단체들과 언쟁을 하기 일쑤다. 합의된 원칙이 없는 것은 중앙관청과 각 시도 주무관청 간에도 마찬가지다.

기부금품법 개정,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

발의된 20개의 법안 중 유효하게 검토되고 있는 의안의 핵심은 온라인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모집 등록 대상의 확대, 기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부 공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검사 강화, 그리고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정의연 사건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지만 기부금 투명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결국 기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데 각 내용들은 투명성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고, 단지 담당 부처가 나름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형식을 만들어 줄 뿐이다.

현재 발의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연간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할 때 반드시 온라인 모집 등록을 해야 하고, 모집이 끝나거나 기부금 사용이 끝나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고, 모집 계획과 상황이 바뀌면 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기부금을 사용해야 하거나 아니면 기부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기부자가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기부금 모금 및 사용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필요시 행정안전부가 기부금 관련 장부를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10억원 이상 모금하는 기관들은 행정안전부 검사를 매년 받도록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이 모든 사항은 각 공익법인 및 단체들이 주무관청과 국세청에 보고하는 사항과 별도로 이루어진다.

모금 현장은 이미 매우 고도화되었고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모금 주체들은 국세청에 기부금 단체 자격을 얻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며, 법인 회계 및 기부금 관련 정기 공시를 하는 등 의무사항이 많아졌고, 국세청은 불법 영수증 발급 조사나 기부금 사용 감독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부금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민간에 직접 개입해서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관리자가 될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반영된 통합 정책을 마련하여 이중적인 행정부담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단체들의 모금활동도 바뀌었다. 일 년에 한두 번 단발적인 모금 이벤트를 하는 대신 정기후원 모집과 같이 지속 가능한 장기적 후원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고, 자발적으로 후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다각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인다. 금융기술의 발달로 일시 후원보다 정기 후원이 늘었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모금활동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고액 자산가부나 유산가부도 늘고, 현물과 상품, 마일리지나 포인트, 미술품, 부동산과 주식,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판권 등 다양한 환금성 가치들이 기부에 등장한다. 한편, 공익법인 외에도 셀러브리티를 위한 팬클럽과 개인 인플루언서들의 후원 요청도 눈에 띄게 늘어 '후원'의 개념이 영리와 사적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기부 투명성,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기부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모금활동을 할 때 준수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못 지켰다는 말이 안 나오게 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에 직접 개입해서 세부내용을 결정하는 관리자가 될 것이 아니라, 현실이 반영된 통합 정책을 마련하여 이중적인 행정부담은 낮추고 실효성은 높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기부 투명성을 높이려면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합목적성을 추구해야

한다. 현재 이 법의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기부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이다. 과거 '규제' 프레임에 갇히면 목적도 효과도 상실하게 된다. 기준틀에서 벗어나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여 현 상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다. 둘째, 기준과 개념, 용어들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기준이 모호하면 자의적, 임의적인 해석이 많아지고 일관성도, 형평성도 무너지며, 적용도 어려워진다. 만약 모집 등록을 꼭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모집자격, 등록대상, 등록 주체, 미등록 대상, 허용 불가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할수록 좋다. 현재 기부금품법의 문제들은 대부분 애매모호한 개념 때문에 생긴다. 셋째, 국세청의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공시 제도와 의무 이행 제도 등 유사한 제도 간의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 기부 투명성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직결되며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간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부는 관리자적 입장이 아닌 정책과 제도로 접근해야 하며, 국민과 비영리단체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영국과 호주, 미국 등은 각자 상이한 방식이지만 총괄 정부 기구와 통합된 법·제도적 시스템 및 자율규제 기구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도를 보고 방향을 제대로 확인해야만 한다.㉠

The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등 공제보험 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목돈마련을 위한 장기저축급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사업 안내]

- ❖ 장기저축급여
-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재가)
- ❖ 신원(재정)보장공제
- ❖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사회서비스 바우처)
- ❖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 ❖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 ❖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 ❖ 복지시설 화재공제
- ❖ 여행배상책임공제
- ❖ 회원대여 (담보대여)
- ❖ 재산종합공제

자원봉사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의 역할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행복한국 만들기' 연속 정책토론회 개최



비대면 시대 기업의 사회공헌, 특히 자원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4월 30일 '행복한국 만들기' 연속 정책토론회의 두 번째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는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화,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사회공헌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활동 방향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

자원봉사 활성화 통해 복지공동체 구축해야

이날 정무성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언택트 시대 기업 자원봉사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의 보건·위생 안전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고 경제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혁신적 복지 정책 구

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러한 형국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복지공동체 정착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개인, 가족, 이웃 및 지역의 자발적 주민조직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의 방향으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케어를 넘어 '관계'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를 구축·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구축과 함께 민간의 다양한 참여 및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전개돼야 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자원봉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ESG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기업 자원봉사를 ESG와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이전의 봉사는 대면, 노력봉사,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자원봉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종교와 시민, 전문적, 정치적, 그리고 국제조직을 통해 자원봉사하는 사람



4월 30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의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반면, 일회성 자원봉사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기업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복지공동체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 소통과 언택트 사회공헌은 새로운 기회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무총장은 '언택트 사회공헌 사례와 전략'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기업 경영, 고객 관리, 마케팅 등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고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비대면으로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사회공헌도 시대적 변화와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최 사무총장은 언택트 사회공헌 사례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사회공헌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중·소도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클래식 공연을 진행한 '온드림 문화사랑의 날'을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변경해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수록된 클래식 음악을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부를 통해 전국 일선 학교에서 음악수업 시청각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했다"며 "문화예술분야 진로교육 및

교육적 효과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지난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장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오던 '온드림 대학생 학술 세미나'는 '제1회 현대차 정몽구 재단 미래 지식 포럼'으로 전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웨비나로 시행해 사전 신청 인원 3000여 명, 동시 시청자 수 2100여 명, 누적 조회 수 3만 회를 달성했으며 포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은 "온라인 소통과 언택트 사회공헌은 기존 사회공헌의 물리적·공간적 제약을 없애고 수혜자 참여 확대 및 온·오프라인 경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물리적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IT 기술에 투입해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메타버스형 사회공헌 특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에서 참여자 한계를 극복하는 포용적 사회공헌 △오프라인 콘텐츠 위주에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융합형 사회공헌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와 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화는 기업과 재단, 사회복지단체에 위기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통해 기업 사회공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❶

클 편집팀



장애인구 고령화 심화...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

코로나19로 외출·정서적 안정·경제활동·의료이용 어려워

지난해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을 분석한 '2020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2만3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만2000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 46.6%에 비해 3.3% 증가해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 26.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했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 23.1%에 비해 증가했으며, 장애인의 결혼 상

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률 3.6%에 비해 약 5.3배 높다.

32.4%가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해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14.0%로 전체 인구 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가 '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이라고 답했다.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졌다.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했다.

지난 1개월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컸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했다.

이동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39.8%가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전용 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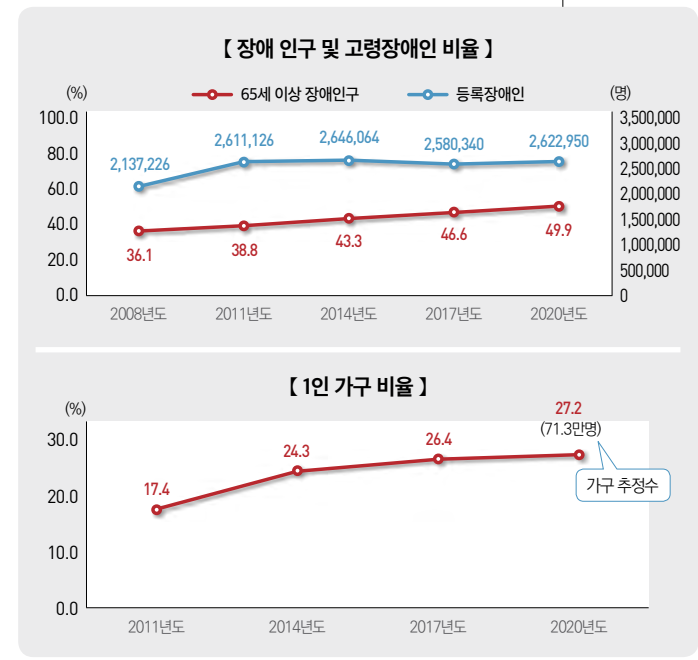
우선적 요구 사항은 소득·의료보장

장애인 가구의 주관적·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낮아졌으며 경제 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 증가했다.

장애인의 32.1%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의 33.9%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준이다.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4.1%로 2017년에 비해 감소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이 76.9%(2017년 81.9%)로 여전히 가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자가 주 지원자인 비율은 18.7%로 2017년 11.5%, 2014년의 11.1%에서 증가했다.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육·교육 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27.0%가 발달재활서비스 확대를 꼽았고, 다음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9.7%)이 높게 나타났다.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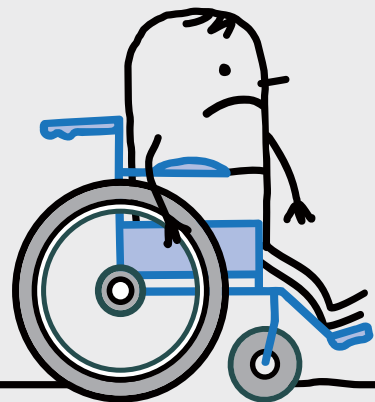
장애인에 대한 미세한 차별과

그 심각성에 대하여

1970년대 영국에서 사회적 모델이 등장했던 배경에는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 가치를 입증받으려 했던 수많은 장애인과 그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에 대한 기존 관점과 물리적인 환경을 장애친화적인 형태로 급속하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장애인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사회적 모델이 장애 억압의 주체로 사회, 그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한했던 사회의 물리적인 환경과 이를 규정하는 각종 제도, 정책을 지목했기 때문이다(Shakespeare, 2006). 이러한 노력 결과, 과거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 가능성을 제한했던 수많은 물리적 환경과 제도,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곧 장애인의 권리의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박정연
유한대학교 보건복지학과 교수



본고에서는 먼저 과거의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참여 범위의 확대 및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경험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인 '미세한 차별(microaggression)'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미세한 차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세한 차별이란?

'미세한 차별'이란 특정 범주의 인간에 대해 그들의 인종이나 민족성, 문화적 특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때로는 불필요하거나 미묘하게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의미한다(Davis, 1989; Dyson, 1990; Solorzano, 1998; Sue et al., 2007).

당초 미세한 차별은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형태의 차별을 설명하는 개념이었다. 이후 그 대상이 인종에서 여성(Sue et al., 2010), 아동(Dyson, 1990), 장애인(Gonzales et al., 2015)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로 서서히 확대되면서 그 적용 범위와 차별의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미세한 차별은 종종 비가시적인 형태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Wong et al., 2014), 또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더욱이 미세한 차별은 주로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특히 피해자를 통해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장애인에 대한 미세한 차별의 사례

미세한 차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비가시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통해 그것의 존재 여부를 확

이와 같이 장애를 둘러싼 물리적 환경의 긍정적 변화와 장애인의 권리의식 향상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로 인해 고립되고 배제된 삶을 살아왔던 장애인에게 급속한 물리적 공간의 확장과 권리의식 향상은 새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상호 이해 부족으로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차별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갈등과 차별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립되고 배제된 삶을 살아왔던 장애인이라면 이들이 겪는 심리적·정서적 상처는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처는 피해자가 직접 드러내지 않는 한 그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또 이 같은 상처가 쌓이면 장애인들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다시금 사회적으로 고립 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인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나타났던 미세한 차별의 사례를 소개한다.

일반 기업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했던 A씨는 휠체어 지체장애인이다. A씨는 퇴근 후 같은 부서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 늘 함께 하고 싶었으나, 회식장소가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 참석할 수 없었다. 어렵게 합석한다 하더라도 비장애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에 그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A씨는 자신의 건강 문제 등을 핑계로 회식에 자주 불참했다고 한다. 이런 자신에 대해 같은 부서의 일부 비장애인 동료들은 “A씨는 회식을 자유롭게 빠질 수 있어서 좋겠다. 우리는 회식에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지는데...”라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용기를 내어 직장 상사에게 자신도 회식에 참석이 가능하도록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A씨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매년 똑같은 식당에서 하는 회식은 또 다른 비장애인 동료들의 불평과 불만을 사게 됐다. 이들은 결국 사내에서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은밀하게 A씨를 따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비장애인 동료들의 이 같은 태도를 명백한 장애차별로 인식한 A씨는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이는 장애차별로 인정되어 해당 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조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 일 이후 A씨는 직장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고 한다. 먼저 직장 동료들은 사무실 내에서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행을 한 후 A씨에게 수시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장애인 차별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분들도 잘 들으세요.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장애인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다녀와야 해요”라고 했다고 한다. 또 직장에서는 그동안 A씨의 장애를 고려하여 암묵적으로 적용해 주던 유연근무제 및 비공식 월차제도 등을 모두 폐지하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 기준을 명확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자신을 대하는 동료들의 이 같은 태도와 회사의 조치로 인해 A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미세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 혹은 피해의식 등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조치 이후 장애차별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교묘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른 나라와 달리, 장애인에 대한 차



장애인에 대한 미세한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은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 혹은 피해의식 등에 있다.

별을 법률로 금지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입증책임제도(가해자 자신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차별의 미세화 과정’ 분석해 예방책 마련해야

지금까지 미세한 차별의 개념과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미세한 차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비가시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를 통해서만 그 실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차별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미국 심리학자인 Harris(2008)는 ‘Racial microaggression? How do you know?’라는 글에서 미묘한 차별의 진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는 다시 말해, 미묘한 차별로 간주되는 행위가 실제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차별행위인지 아니면 그들의 피해의식에 근거한 편집증적 사고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Harris의 지적은 구조와 행위, 실재와 구성 등과 같은 사회과학의 전통적인 인식론적 이

분법, 즉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차별의 진위 여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세한 형태의 차별이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피해자들의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의 심리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Wong et al., 2014).

더욱이 오랜 시간 장애로 인해 사회 내에서 고립되고 배제된 삶을 살아왔던, 그래서 제한된 인간관계만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법적으로도 차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미세한 형태의 차별은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다시금 사회 내에서 고립 또는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미세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회복과 유사 사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 현장과 유관기관, 그리고 학계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차별의 미세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㉔

* 이 글은 필자의 연구논문인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ROUTINE AND EVERYDAY AGGRESSIONS TOWARD DISABLED PEOPLE'(DISABILITY & SOCIETY, 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40% 결혼 후 5년 동안 '무주택' ... 맞벌이 가족 아이 덜 낳아

신혼부부 통계로 본 혼인 후 5년간 변화는?

2019년 혼인 5년차 초혼부부의 변화상



5년차 초혼부부의 주요 특징



유자녀 부부의 첫째·둘째 자녀 출산시기



출산 현황별 아내 경제활동 변화



주요 경제활동별 출산 및 주택소유 변화



주요 주택소유별 출산 현황 및 변화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 평가 결과 '평균 87.4점'

우수시설 61.3%로 2017년 대비 9.4% 증가...미흡시설 5.9%

지난해 전국의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그룹홈, 장애인그룹홈, 정신재활그룹홈 1745개소를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는 87.4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장애인복지관 144개소, 노숙인생활시설 107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151개소, 아동그룹홈 467개소, 장애인그룹홈 659개소, 정신재활그룹홈 158개소 등 7개 시설 유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 질 향상 노력 평가하는 정성지표 도입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환경 △재정·조직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시설 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되며, 소규모 시설인 그룹홈의 경우 △시설·환경·운영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서비스 △시설 운영 전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도입해 평가를 진행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 위원이 서비스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해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성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시설 유형별 평균 점수는 노숙인생활시설 83.6점, 장애인복지관 94.7점, 정신요양시설 92.7점, 정신재활시설 91.5점, 아동그룹홈 89.7점, 장애인그룹홈 82.4점, 정신재활그룹홈 91.1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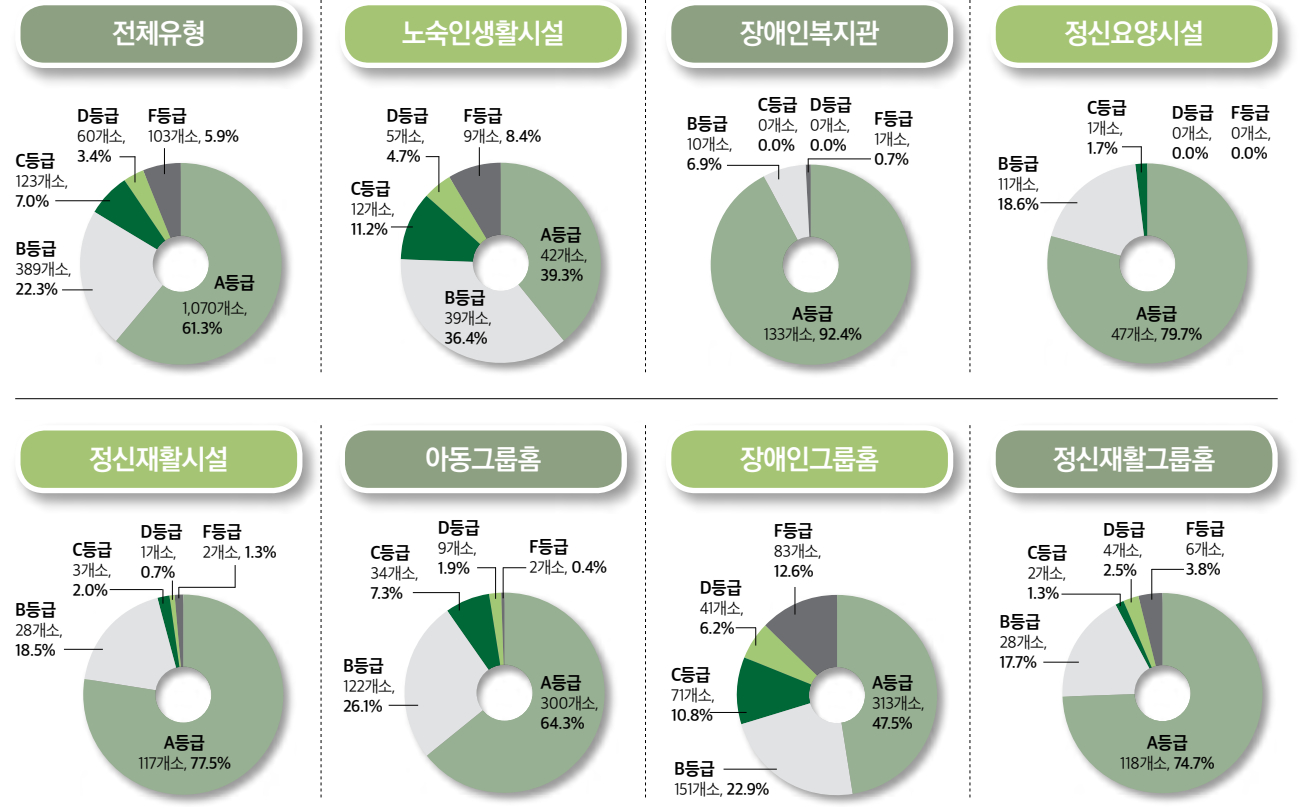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90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은 우수시설은 1070개소로 61.3%였으며, 60점 미만으로 F등급을 받은 미흡한 시설은 103개소로 5.9%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는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인 80~9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등급별 현황



정신재활그룹홈 83.9점→91.6점으로 7.7점 상승

전기(2017년) 대비 평가 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 폭이 80.7점에서 84.3점으로 3.6점 올라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은 94.9점으로 동일하고, 정신요양시설은 89.6점에서 92.7점으로 3.1점, 정신재활시설은 89.7점에서 92.4점으로 2.7점 상승했다.

소규모 시설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이 83.9점에서 91.6점으로 7.7점 올랐으며, 장애인그룹홈은 80.7점에서 83.9점으로 3.2점 상승했다. 아동그룹홈은 2020년 신규 평가로 점수 비교는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유형별 상위 5% 내외의 우수시설과 이전 평가 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3% 내외의 개선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D~F 등급을 받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자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 권대경 기자



4월 7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제9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지소외계층 발굴·지원에 헌신한 '좋은이웃들' 한자리에

‘소외된 우리 이웃 지킴이’ 제9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 열려

복지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 공적 서비스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주는 ‘좋은이웃들’ 사업이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았다. 4월 7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는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해 헌신한 좋은이웃들 봉사자와 관계자를 표창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제9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가 열렸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되어

활동한다. 지역사회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을 자원봉사자인 ‘좋은이웃들’로 위촉·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봉사자가 지역사회 읍면동 단위로 담당 구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내 복지소외계층을 파악해 발굴·신고하면 좋은이웃들 사업 수행기관은 대상자 상담 후 시군구에 의뢰해 공공복지급여 지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긴급 지원, 지자체 지원 등 공공복지급여와 연계하거나 수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부식품, 기부금 등 사회공헌 자원, 인적 자원봉사 등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약 19만명의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 63만여 건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날 전국대회에서는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봉사자 및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등 총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봉사자 중에서는 강릉시 김흥기(72세) 씨, 거제시 박명옥(65세) 씨, 영등포구 이해영(66세) 씨, 보

성군 김인옥(40세) 씨, 광양시 이은평(66세) 씨, 홍성군 이은규(64세) 씨, 진주시 윤재철(48세) 씨 등 7명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의 주인공이 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2021년 신규 수행기관에 대한 현판 수여,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채널 ‘나눔채널 공감’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글 객대경 기자

미니인터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자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 이은평 봉사자

2016년 광양시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된 이은평 씨(66세, 남)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 전 대상자 사례관리를 한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사는 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는 “좋은이웃들 활동을 통해 봉사의 기쁨을 느끼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Q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 후원자가 됐고, 이후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좋은이웃들 사업에 관심을 갖고 봉사자가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이웃들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Q 그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나?

“소외계층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기업·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다. 추가적인 대상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접 사업을 홍보하며 자원 연계에도 나서고 있다. 대상자를 만나면서 아직도 구석 구석에는 어렵게 사는 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평범한 삶도 큰 행복임을 알게 됐다. 그 감사함에 보답하기 위해 요양원을 찾아 어르신들의 식사보조를 하고 있다.”

Q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었는지?

“식품 박스를 지고 30분을 올라 산 중턱에 사는 대상자에게 물품을 지원했다. 눈물을 흘리며 집 앞 감나무에서 딱 감과 이것저것 먹을 것을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에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Q ‘좋은이웃들’ 사업의 의미는, 또 봉사의 의미는?

“어려운 분들을 직접 찾아 도움을 주는 좋은이웃들 사업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밝게 만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활동하면서 고마워하는 어르신에 대해 때마다 ‘남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좋은이웃들 활동이구나’ 하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봉사의 기쁨을 느끼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이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는 후원인을 찾아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1:1 매칭을 해주고 싶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방향은?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3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다리며, 지난 1년간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는 3월 31일 코로나19 발생 후 서울시의 복지 분야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의 역할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연대 강화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이 '코로나19 시대, 종합사회복지관의 대응과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코로나19 시대라는 위기상황에서 복지관 종사자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뉴노멀은 이용자 눈높이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공동체와 주민주도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관의 역할에 관하여, “다양한 주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연계·협력이 중요하다”며 “위기 상황에서 정보접근성은 생존과 직결되므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의 장기요양서비스 변화 경향’을 주제로 노인 관련 이슈를 풀어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시설이 감소하는 경향이나, 한국만 요양시설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민간 공급기관 관리 강화 및 공공기관 확충 △향후 감염병 등 유사상황 발생시 작동기제 준비 △지자체 및 건보공단 역할 설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궁극적으로 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서비스 계획, 제공,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곳은 지자체”라며 “이용자 중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아동돌봄 관련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돌봄공백 부담 가중 △위험단계별 주요정보와 지침 공유 미흡 △유치원-어린이집 및 국공립-사립 간 다른 대응체계 △긴급돌봄 이용률 상승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이후 자녀양육가구의 소득 및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지출 부담이 커 가정 내 돌봄 및 교육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보육·돌봄체계 전반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사대 아동비율, 공간기준, 온·오프라인 커리큘럼 운영, 인력배치 등 정책기준 정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홈스쿨링 등 가정양육지원 체계화, 돌봄휴가·재택근무·유연근로 등 시간지원 확대, 돌봄공백·교육격차 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코로나19와 장애인 이슈’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를 이어갔다.

그는 △장애인시설 집단감염·사망·코호트격리 △발달장애인 가족의 과중한 부담 △자가격리 중 중장애인 지원 대책 부재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진단했다.

특히 “코호트 격리는 확진자 발생과 관계없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으며, 거주시설의 억압적 본질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시설에서의 보호는 이용자를 지역사회로부터 고립시켜 건강한 시민으로 존재하기 어

렵게 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워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어렵다”며 탈시설 이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면·비대면 서비스 조화 이뤄야

이날 종합토론은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최 관장은 “주민들의 복합적·통합적·맞춤형 접근에 대한 요구는 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인원을 줄여 진행하는 교육사업 등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비스가 축소됐으며 예산을 깎는 경우도 있다”고 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문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지자체 역할 강화에 대한 방법론을 어떻게 찾아가는지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처럼 각 지자체별로 논의의 장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아이들은 지역사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유연한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부처별로 다른 돌봄 정책을 내는 가운데, 아이들이 칸막이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집에 오는 형태의 긴급돌봄은 최소화하는게 낫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돌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지만, 이 흐름이 사실상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돌봄 축소로 이어진다면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대면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택트 돌봄의 질이 사람을 통해 이뤄지는 돌봄의 질보다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①

글 한유미 기자





지역 사회공헌 인정기업을 가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한국중부발전'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단' 출범



1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중부발전. 충남 보령시에 본사를 둔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12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됐다.

중부발전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전 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공기업이다. 국내 7개, 해외 5개의 주요 발전소를 운영 중에 있다. 2004년 '사랑으로 희망을, 나눔으로 웃음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사회봉사단을 창단한 중부발전은 'KOMIPO와 함께하는 보다 나은 삶+'를 목표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춰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 앞장

중부발전의 사회공헌활동은 △그린 스마트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육성으로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팜 조성 등 스마트 주민 체감형 사업 △지역 맞춤형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사업이 대표적이다.

먼저 친환경·산업안전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그린 뉴딜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선정된 6개 사업의 제품 개발과 사업화 등에 약 2억원을 지원해 민간 직접 일자리 24개와 3억 3000만원의 매출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중부발전은 보령지역 특산품인 포도, 딸기 재배 농가 17곳에 시설원에 정보통신기술 장비와 정보시스템을 설치해 스마트 팜을 조성했다. 사업 과정에서 농가 사전 컨설팅, 제어시설 운용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해 4차 산업시대 미래 농촌주민 역량 강화에도 기여했다. 또 마을 주민 100%의 참여를 이끌어내 참깨, 들깨 등 가공 농산물 착유공장을 설립하고 생산 제품의 직거래·온라인 판매도 지원했다.

중부발전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처해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는 2017년부터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해 1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4050세대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년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비대면·친환경 녹색산업 분야 제2기 청년창업팀 공모를 통해 3개 팀을 선정하고 창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2 1.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전경
2, 3. 2004년 창단한 중부발전 사회봉사단은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 지원해 갈 것

중부발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지역 경제 살리기 대책단'을 출범해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조기발주 및 우선 구매 등으로 투자비 집행에 1조 5000억원을 조속히 집행했으며 △지역 화훼 구매·지역사랑상품권 활용 등 착한 소비 운동 전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164억원 융통 지원 △민·관·공기업 협력을 통한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으로 매출 확대 △온라인 구매상담회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울러 임직원, 노동조합, 협력기업과 3억원을 조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K-산타클로스 프로젝트'도 시행했다.

지역 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학생 20여 명에게 '희망 장학금'을 전달하고 이동차량이 절실한 복지시설 등에 친환경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 5대를 지원했다. 사연 공모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해 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소외가정 100여 세대에는 생필품을 담은 코로나 극복 키트를 전달했다. 이 외에 직원들의 자율적 기부를 바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결손가정 등에 급식지원과 함께 1억원 상당의 희망물품을 지원했다.

이처럼 전사적인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과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중부발전은 앞으로 그린 스마트 사업 등 농어촌 상생 협력 사업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발굴형 나눔문화 프로젝트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글 권대경 기자

나는 사회복지사다

“인생의 절정,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는 일”

환자와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복지사 될 것



신애리
서초참요양병원 사회복지사

“꽃이 다 피었네, 아 예뻐라.”
 “바람이 이제 따뜻하네, 저 잎 푸른 것 좀 봐.”
 병원 1층 통유리창 앞, 옥상 야외정원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환자들이 봄을 바라본다.
 “어머님,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아버님, 여기 보세요” 내 앞의 이분들은 얼마나 많은 계절을 그리고 그 계절 속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을 지나왔을까. 다시 마주한 봄에 감탄하는 모습은 풍경만큼이나 나를 미소 짓게 한다.
 핸드폰 화면, 카메라 뷰파인더 속, 내 쪽을 바라보며 크게 또는 멋쩍게 웃으시는 그 모습은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풍경보다도 아름답다.



1



2



3

- 1. 병원 1층 프로그램실에 전시한 환자들의 작품. 다시 함께 모여 프로그램 활동할 날을 기다린다.
- 2. 한 어머님이 완성한 '나만의 5월 달력'. 모든 날이 행복하시기를.
- 3. 생일을 축하드리며 함께 찍은 기념사진

오늘이 참 소중하다
 요양병원에서의 주된 내 역할은, 환자들에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다.
 프로그램 시작 전, 미리 와 기다리던 환자들이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반겨준다. “난 이 시간이 제일 좋아”, “(준비된 재료를 보며) 오늘은 뭘 만들어요?” 기대하는 모습을 볼 때 프로그램을 준비한 나로서는 기쁘고 감사하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웃으며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사회복지사인 나의 바람이지만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컨디션 저하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상급병원으로 응급 전원을 가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환자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

코로나19 속 마음과 마음을 잇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든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들 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가족들과 손 한번 잡아 보지 못한 기간이 일 년을 훌쩍 넘었고, 여럿이 모여 함께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단됐다.
 유리창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모습, “이제 곧 좋아질 거니까 식사 잘하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은 영상 통화 서비스, 환자의 병원 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보호자의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드리려 하고 있다. 평소 영상통화 진행이 어려웠던 환자 한 분이 태블릿pc 화면에 나타난 가족의 얼굴을 본 그 표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환자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활동 모습, 일상생활, 재활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담아 영상을 제작하는데, 손잡기는커녕 가족의 얼굴조차 가까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굳건히 지내는 모습이 참 다행이면서도 몽클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날은 바로 환자의 생일이다. 유리창 너머로라도 함께 축하하는 그 사랑과 정성에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나도 감동한다. 유리창을 경계로 병원 안 환자와 병원 밖 가족들이 다 함께 나를 바라보며 웃는 그 순간을 촬영해 액자에 넣어 선물한다.

“올해는 같이 사진 한 장 못 남기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의 가족들이 내년에는 한데 모여 이 사진을 보며 추억할 수 있길 나는 간절히 바란다.
 요양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다고 말하면 “힘들겠다.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일 텐데 그곳에서 일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나”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어둡고 침울한 곳?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환자들로부터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사회복지사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다. 환자들과 함께 써나갈 내일의 이야기가 기대되는 나는 ‘사회복지사’다.⓪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실무자로
한평생 현장을 누비다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국회에 입성한
이종성 국회의원을 만나보았다.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1995년 5월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입사한 계기로 ‘장애인 복지’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당시 중앙회장이었던 故 장기철 회장께서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정치세력화’를 주창했다. 이는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계의 대표주자를 찾던 미래통합당에서 인재영입 제안이 와서 수락하게 됐다. 아무래도 26년여의 실무경험이 인정됐겠지만, 장애인 정치지도자를 열망해왔던 지체장애인협회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21대 국회 입성 후 장애인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 활동은?

“현재까지 20여 건의 장애인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그 중 ‘장애인학대 예방 문제’와 관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장애인학대가 증가하고 행위자 처벌은 미미한 수준임에도 현행법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며, 상습적으로 또는 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28일 대표 발의했으며,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입법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지속 여부’는 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선거운약으로도 제시한 사항이다. 이에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제1호 법안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직 법률이 당초 발의한 내용대로 개정되지 않아 모든 65세 이상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나마 지난해 일부 법안 개정 및 예산 반영으로 올해부터 기존에 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장애인들이 65세가 되어도 활동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현 정부가 의료보장성을 확대한다며 일명 ‘문케어’를 표방했음에도 여전히 중증암환자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암관리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제안해 많은 암환자 단체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뜻을 전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옹호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41회째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권과 환경 변화는 요원하다. 어떤 장애인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하지만 아직도 비장애인 대비 2배에 달하는 실업률, 전체 가구 평균의 71%에 불과한 평균소득,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적 인식 속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 정책과 제도들이 사회환경적 변화에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장애인 문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장애인 개인의 측면, 그 가족에 대한 지지, 사회구조적 지원체계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특정한 요구나 사업에 치우치지 않고 교육·의료·주거·고용·소득·문화 등 정책 전반에 있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가 충분하고 적합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사회서비스원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단체, 전문가 및 정부측과도 활발하게 의견수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동 제정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법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현장의 우려와 요청사항들이 대부분 해소되거나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4월 16일 ‘사회서비스원법, 복지개혁의 올바른 방향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직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방향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안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서비스원으로 인해 민간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의 자율성·창의성 침해, 서비스 종사자 간 처우 등 불균형 극대화, 지자체장 측근의 자리 나눠 먹기, 종사자·노조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며, 사회서비스 발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질 관리,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서비스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및 평가 등 사회복지 전반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지난해 11월 사회서비스원이 당초 목표로 했던 ‘민간이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사회서비스 시설들의 역할을 조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처방이 우선되어야만 전체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의 열매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터’ 회원으로 밝혀져 많은 화제가 됐는데,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작은 손길 여럿이 모여 큰 힘이 되듯 나눔의 실천으로 대한민국에 온정이 넘쳐나길 기원하며 기부를 약속했다.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알려지게 되어 많이 부끄럽다. 팬데믹과 경제 위기로 전 세계가 어려워하는 만큼, 나눔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나눔문화의 ‘정착’이라는 것은 경제 위기와 별개로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의 기부와 봉사 활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으며, 특히 어린 시절 관련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기부나 봉사참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나눔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나눔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나눔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 본다.”

사회복지 현장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민간 사회복지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 같은데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복지계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성장을 자랑하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복지 제도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과 제도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복지야말로 나라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계에 몸 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더욱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지난 26년 간 장애계의 권익 신장을 위해 일해 왔고 그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민의 대표로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애인 복지가 시혜적인 것을 넘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을 증명하고 실제로 정책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됐다. 현재의 복지 시스템에서는 장애인도 어렵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복지 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한다. 현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복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며, 그저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복지체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복지체계의 정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 중복 지원과 부정수급 해소 등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많은 일을 했음에도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고 이름만 남는 국회의원이 아닌,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항상

현장에서 함께하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꼭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으로서 남고 싶다. 장애계를 대표해 국회의원직을 맡은 역할과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임기를 마칠 때 의정활동이 장애계를 포함해 소외계층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는 평가, 결과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다.”

글 전우일 편집장 사진 강민구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돌봄 대통합과 아동 중심의 대전환에 주력하겠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는 “유엔에서도 아동 최우선을 원칙으로 세우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배타적이다”라고 지적하며 아동 중심의 인식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이용시설로 예방적 복지를 실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와 돌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교와 가정을 잇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된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방과 후 등 여러 환경을 고려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보호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전국 NPO로서 ‘이용자 중심’과 ‘공동체적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분명한 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정부 정책 활동, 교육과 배분, 강점관점의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회원 복리증진 활동 등 전국 14개 지부, 630여개 센터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대표로 계시면서 다짐한 각오와 포부를 들려 달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출산율 0.84명 시대에 아동의 돌봄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투자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여전히 암담하다.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말해주듯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후진적이고 관료적이다. 유엔에서도

아동 최우선을 원칙으로 세우기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배타적이다.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아이들이 먼저’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연합회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인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자체의 돌봄 체계 등이 모든 것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차이를 잘 모를 정도로 언제부턴가 돌봄 체계가 관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보호자나 아이들,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얻기 어렵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체계 간 이해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갈등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둘러 아동 중심의 시스템을 재구조화할 적기라고 본다. 이에 연합회는 5월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돌봄 대통합과 아동 중심의 대전환,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인식과 사회적 지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환의 화두를 던진다.”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금은 답답한 현실이다. 2004년 지역아동센터 법제화 당시 사교육 문제 해소와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과제였다. 지금은 돌봄이 ‘학교와 상대적인 사교육 시장인가?’ 아니면 ‘복지적 서비스인가?’에 갈팡질팡하다 코로나19 여파로 학력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 현

옥경원 대표는 임기 중 꼭 완수하고픈 목표에 대해 “지역아동센터가 마을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사실을 보편적 사실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장은 평균 2.4명이 25명,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을 돌보고 있다. 더욱이 외부 인적 자원의 방문을 극도로 자제시키고 있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학교의 등교 중단 시기엔 오랫동안 상대적 고충을 호소해왔다. 때마침 보건복지부가 상황을 인식하고 우수 센터 예산을 전체에 수혈했고 추경을 통해 연말까지 1인의 돌봄 인력 지원을 결정했다. 복지부에서는 ‘현장의 노고를 재정부국이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수준과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인식’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본다. 전 국민 자격증이라 일컫는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스스로의 장벽이 됐다. 그 이유는 대체제로서 잉여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체제가 많으면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결국 처우의 수준은 집단의 전문성과 희소성에 대한 가치 증명과 직결된다고 본다. 경제논리와 연동되는 자격증 발급 구조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발급처의 운영상황은 나아지겠지만 결국 스스로 자격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다.”



2019년 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 결기대회' 현장. 이날 옥경원 대표를 비롯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지지자 6000여 명은 정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의 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바로 거버넌스다. 과거 한국전쟁 이후의 복지는 국가의 몫이었다. 자본력이 부족한 정부는 민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유와 공공성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는 가성비 높은 대안을 찾게 된다. 바로 비영리단체와 NGO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수탁 사업에 대거 참여했다가 책임과 의무에 비해 매우 약한 권리에 흥미를 잃으면서 최근 한 걸음씩 물러서고 있다. 이 때문에 영리와 비영리의 경계를 허문 사회적 경제로 복지의 주도권이 이동할 것이라 기대됐지만 놀랍게도 다시 정부로 회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돈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복지 국가 책임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라 생각한다. 거버넌스는 사회복지 국가 책임의 가장 중심 위치에 서야할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날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어느 순간 복합적이고 다변화된 사회 욕구들이 폭풍을 일으킨다면, 정

부는 다시 민간에 손을 내밀게 돼있다. 이 순환의 고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 간 거리를 요구함으로써 거버넌스가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무게의 균형을 정부 중심, 행정 중심으로 가져간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사회적 경제의 발전이 더뎠다는 것도 못내 아쉽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을 한 가지만 꼽자면?

“전반적인 돌봄 생태계의 안정을 이루는 일이다. 아동의 돌봄에서 학교와 마을은 서로 뗄 수 없는 범주이다.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급변하는 돌봄 생태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마을 돌봄분야에 중추적인 뿌리를 내리고 마을 돌봄 체계를 통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낙인 없는 아이들의 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충분한 양적, 질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우위를 정부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태생이 ‘관료’

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과가 중요한 메커니즘에서 민간의 권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관료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변하게 되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발돋움할 뿐 아니라 저출산 해결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아동센터가 마을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사실을 보편적 사실로 만들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는 ‘공동체’라 생각한다.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지역사회로 연결된다. 결국에는 학교차로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력은 필수조건이다. 약자들은 더더욱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도 계속 애써주고 계신 사회복지 선후배와 동료들께 감사드리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꽃갓하게 헤쳐 나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동료들의 헌신에 진심 어린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글 이성우 기자

어린이의 희망을 키우는 새생명지원사업은...



“소아암·희귀난치질환 어린이와 함께 합니다.”
“당신의 후원금으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환아와 가족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전합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소중한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예 금 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수 협 408-01-003701
능 협 048-01-066568
국민은행 099-25-00110-607
우리은행 007-127792-13-201
하나은행 176-023563-00105

소득공제 및 새생명 소식안내를 위해 후원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문의 02)2077-3964,3962 홈페이지 www.kids119.or.kr

일본

사회적 고립 심화... '동거고독사' 증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등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고독대책 담당 장관을 임명하고, 정책집행을 위한 정부 조직인 고독·고립대책 담당실을 편성했다. 일본의 고독사 문제 현황과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글 오세웅 리츠메이칸대학 산업사회학부 부교수



심화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일본에서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부터다. 당시 NHK가 방영한 스페셜 방송 '무연 사회(無縁社会)'에서는 신분 불명의 자살자와 고독사 등을 '무연사'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무연사가 연간 3만 2000건에 이른다고 보도해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고령자 소재불명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관계성의 결여와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2011년에는 민간연구기관인 닛세이 연구소가 전국 인구동태통계 데이터를 이용해 고령자의 고독사 수를 추산해 제시했다. 자택 사망자 중 사후 2일 이상 경과한 경우

를 고독사로 정의하고, 연간 2만6821명이 고독사로 사망한다고 보고했다.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더불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부 확인 활동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한 대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독사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겹치면서, 비자발적 고립과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독사의 약 70%가 고령자, 남성이 여성의 3배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여전히 그 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전국조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고독사를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실시한 조사와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우선, 동경도 감찰 의무원 통계자료에는 '독거노인의 자택 사망건수'를 매년 집계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2003년 2672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336건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성은 1.8배, 남성은 2.7배 증가했다. 이를 단순히 고독사 발생 건수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중에서 사후 며칠이 지난 후에 발견된 경우를 고독사로 분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고독사 위험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오사카부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오사카부 내에서는 고독사로 2996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됐다. 이 조사에서는 고독사를 '사건의 가능성이 없고, 임종 시 누구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가에서 사망한 자 중에서, 사후 2일 이상 경과 후 발견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3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22.8%), 80대(19.1%),

50대(13.3%) 순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약 7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0대 159명, 50대 392명, 합해서 18.4%를 40~50대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고독사가 더 이상 고령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고용의 불안정화, 미혼율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2015년 기준 일본의 미혼율을 보면, 여성은 7명 중에 1명, 남성은 4명 중에 1명이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2213명(74%)으로 여성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독거노인 수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주로 지적되는 요인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사회활동이나 이웃과의 교류가 서툴기 때문에, 노후에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잃기 쉽다는 점이다. 이 외에 남녀의 대화 빈도에서도 단초를 찾을 수 있다. 2017년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거 고령자 세대는 그 외 세대보다 대화 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 남성 고령자는 '2주일에 한번 이하'가 14.8%, '1주일에 한번 이하'가 10.7%로 나타나, 여성(5.4%, 7.4%)보다 대화 빈도가 약 2배 정도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후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남성 고령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기 쉽다. 남성 고령자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마련과 함께, 중장년 시기부터 지역사회 및 이웃과의 교류를 넓히고 일상화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다.

고독사 비즈니스의 활황과 그 씽씽함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사후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청소사업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특수청소사업은 일명 '쓰레기 집'이나 거주자가 사망한 후에 유품 정리 및 청소와 사후 행정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청소업체를 말한다. 일반적인 청소로는 주택의 원상복구가 어려운 자살 사건

이나 고독사로 인해 시체가 장기간 방치되어 집안의 오염이 심한 사례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최근 고독사가 늘어 이러한 특수청소사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이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민간자격증이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일본 전역의 5000여 개 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특수청소 연합단체인 '사건 현장 특수청소센터'에 따르면, 2013년 민간자격증인 '사건 현장 특수청소사'가 실시된 이후 2018년까지 5년간 취득자가 약 1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편, 고독사와 관련된 보험사 상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2011년 '아이알 소액단기보험'이라는 보험회사가 '임대주택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비용과 집세를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 상품'을 처음 출시해 2018년 현재 2만3000건의 보험계약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대형 보험사들도 고독사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그 종류도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뿐 아니라 세입자 본인이 임대주택에서 사망 시 청소 및 원상복구비용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고독사 보험도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독사 비즈니스가 활황이라는 것은 고독사가 그만큼 일반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고독사에 대한 처리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활약은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만하지만, 이처럼 고독사가 비즈니스의 동인이 된다는 점은 참으로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동거고독사’라는 새로운 고독사의 증가

최근 들어 일본에서는 ‘동거고독사(同居孤獨死)’라는 새로운 유형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동거고독사란 동거가족이 있지만 자택에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발견된 경우를 말하는데, 최근 NHK는 사망 후 4일이 지난 경우를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사카시에서는 최근 3년간 86명, 동경 23구에서는 448명의 동거고독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지역에서의 조사이고 일반 고독사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수십 배 이상의 수치가 집계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이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는 것일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부부 세대가 늘어나고 치매, 외상 노인 등의 재가 케어가 늘면서 가족 케어자의 돌연사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히키코모리 등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고령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동거고독사 증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2019년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수는 2558만4000세대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 ‘노인부부 세대’는 827만 세대(32.3%), ‘단독세대(독거노인)’는 736만9000세대(28.8%), ‘부모와 미혼자녀 동거세대’는 511만8000세대(20.0%)이다. 고독사는 독거노인 세대의 증가가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지만 동거고독사는 노인부부 세대나 미혼자녀 동거세대 등과 같이, 가족이 있지만 서로에게 의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거나 과도한 상호의존 관계, 혹은 가족관계의 소원함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의학자로서 사인 규명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대학의 오쿠다 타카히사 교수는 최근 발생하는 동거고독사에는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이 있다고 말한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사례 1 노인부부 세대

부인이 오랜 기간 외상의 남편을 수발하며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택에서 쓰러져 급사하고 말았다. 홀로 누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남편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 계속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것이 걱정된 친척이 경찰서에 신고해 방문해보니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일명 ‘노노케어’는 일본의 전체 재가요양세대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비율도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부가 함께 사회적

로 고립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등 동거고독사의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다. 노노케어 세대에 대한 지역사회 및 사회서비스 기관과의 접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례 2 노부모와 미혼자녀 동거세대

노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녀 세대에서도 동거고독사가 종종 발생한다. 우선,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를 가진 부모를 자식이 홀로 수발하다가 자녀가 돌연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자녀가 히키코모리로 부모의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다가 부모가 죽은 후에도 연금 수급을 계속하기 위해 사체를 유기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전국에서 28건이 보고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홀로 생활이 어려운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모가 돌보다가 부모가 자택에서 돌연사하는 바람에 자식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른 사례도 있다. 나아가 80대 부모와 50대 자녀가 함께 사는, 특히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자녀와의 동거를 의미하는 일명 8050세대도 동거고독사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사례 3 가족 간의 관계성 단절

중년부부와 20대 아들, 할머니가 같이 사는 어느 다세대 가족의 사례다. 식료품점에 근무하는 부인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일거리가 늘어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한편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사도 혼자 할 정도로 가족 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 생활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아들이 아버지가 한 동안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방에 갔더니 숨져 있었다. 사망 후 이미 열흘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열흘 동안 가족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가족들의 안타까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대화 기회가 줄어들고 가족 간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

계성 약화는 최소단위의 안전망인 가족의 케어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처럼 동거고독사라는 비극을 낳기도 한다.

고독 담당 장관 임명과 조직 설치의 의미와 과제

2018년 1월, 영국은 ‘고독 담당 장관’을 임명해 고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공언했다. 영국에도 900만명 이상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독 대책 담당 대신(장관)’을 임명하고 지난 2월에는 약 30명의 직원을 배치한 ‘고독·고립대책 담당실’을 설치했다. 일본에서는 이전에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고독사 방지 대책을 정책화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독과 고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 것이다. 당면 과제로는 자살, 히키코모리, 고독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상담창구 마련 등을 내걸고 있다. 조직 설치 직후인 현시점에서 월가알부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고립’, ‘고독’을 정부가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더 이상 개인 책임론으로 치부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노인에게 차가운 나라 일본’ 저자인 카와이 카츠요시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안정한 일자리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노후빈곤과 사회적 고립, 하지만 이처럼 곤궁한 상황에서도 도와달라고 말 못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해온 정책이 낳은 결과가 바로 고독사이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개인 책임의 범주를 넘은 사회적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정부에 의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당연한 듯하지만 좀처럼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지적임에 다시금 되뇌어 본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의 무언의 SOS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실천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 ㉞



네덜란드

연금 수령 시기 연장해 지속 가능성 높인다

세계 최고의 연금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 네덜란드는 최근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노년층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면서 연금 수령 시기를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글 장성아 네덜란드 해외통신원

글로벌 연금지수의 컨설팅 회사인 메르세르 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3년 연속 세계 최고의 연금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로 기록됐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호주였다. 메르세르의 글로벌 연금지수는 전 세계 39개국 연금의 적절성, 미래 보장성 및 무결성을 기본으로 연금 시스템을 평가해 국가마다 점수를 매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두 개의 국가만이 유일하게 퇴직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받는 나라로 A등급을 받았다.

이 계산 방법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2019년 80.3점을 획득했고, 2018년에는 81점을 획득했는데 특히 무결성에서 88.3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다른 2개의 분석에서도 상위 3위 안에 들었는데, 경제 성장과 노동 참여의 증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네덜란드는 노년층의 노동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연금 수령 연령대를 지연시키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자문단은 밝혔다. 메르세르에 따르면 가구당 저축을 증가시키고 부채를 줄이면 총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네덜란드의 연금은 국민연금인 아오베(AOW), 고용주를 통해 적립되는 연금 및 본인이 적립하는 개인연금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또한 다른 형태의 연금으로는 유족 연금, 파트너 연금 및 장애 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 아오베(AOW)

국민연금인 아오베는 네덜란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연금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적립하는 기본 연금이며 이를 사회보장이라고도 칭한다. 15세부터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국민은 매년 2%의 연금을 적립한다. 15세에서 65세까지 50년 동안 네덜란드에 계속 거주하거나 일하는 경우 100%의 국민연금을 받으며, 네덜란드에서 거주하거나 일하지 않은 해마다 국민연금이 2% 감소한다. 1인 거주자의 연금은 최소 연봉의 70%이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연금은 최소 연봉의 50%이다.

<표> 네덜란드 국민연금 수령 연령

연도	국민연금 수령 연령
2020년	만66세 4개월
2022년	만66세 7개월
2023년	만66세 10개월
2024년	만67세

네덜란드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 수령 연령을 연장하고 있다. 2017년까지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만65세였으며, 2018년부터 만66세, 2024년부터는 만67세다. 평균수명이 1년 연장되면 연금 수령 연령은 8개월 연장된다. 고용주 연금은 2014년 만65세에서 만67세로 변경됐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되어도 근무를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세금혜택이 있으며, 국민연금은 월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로 받는다.

조기 퇴직

네덜란드 정부는 조기 퇴직을 장려하지 않기에 2005년부터 조기퇴직제도(RUV)에 '조기퇴직 부과금제'를 도입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조기 퇴직을 고려해 사전에 조기퇴직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조기 퇴직 시 이 최종 금액의 52%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조기퇴직 적립보험금이 10만 유로면, 조기퇴직부과금이 5만2000 유로가 부과된다.

연금 공백

고용주는 근로자가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적립을 하지 못한 공백 기간을 면세로 적립하도록 해줄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 사회보험은행을 통해 국민연금의 공백 기간을 적립할 수 있다. 네덜란드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계획이거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다가 늦게 네덜란드로 이주한 경우도, 거주한 지 10년 미만일 때 연금 공백을 지원받아 적립할 수 있다.



201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진
연금 시위

사진출처 <https://www.rtlnieuws.nl/nieuws/nederland/artikel/4480946>

고용주 연금

고용주 연금은 급여의 일부를 회사가 따로 적립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기업의 90%가 이 혜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연금 재단이나 보험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부분은 총 금액의 3분의 2를 기업이 지불하고, 3분의 1은 근로자 월급에서 지불한다. 고용주 연금에는 평균 급여 체계와 최종 급여 체계가 있다. 평균 급여 체계는 퇴직 후에도 급여를 받고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의 평균 연봉을 받는 것을, 최종 급여 제도는 마지막 급여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주 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간 약 2% 이상을 적립해, 35년 동안 근무하면 퇴직 후 70%를 수령한다. 이 외에도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년에 사용할 연금은 충분하다.

연금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고용주 연금은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하락 및 이자율 하락에 따라 네덜란드의 4대 주요 연금재단은 모두 자금 부족 문제에 처했다. 공무원 연금재단인 아베베(ABP)는 2021년 연금 보상률을 88.2%로, 의료봉사자 연금재단인 페페제베(PFZW)는 연금 보상률을 88.5%로 발표했다. 이는 재단이 미래에 지불해야 할 연금이 100유로

라면 보유자금은 88.2유로 혹은 88.5유로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 재단에 따라 근로자들의 개인부담금이 향후 7%, 10% 혹은 20%까지 상승할 수도 있으나 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연금 시위

주변국이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연금 시스템을 가진 네덜란드에도 노조단체 주도의 연금 시위가 거의 매년 행해지고 있다. 201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담 광장에는 수천명의 노조단체 페프엔베(FNV)와 쉐엔베(CNV)와 시민들이 집합해 연금 수령 연령을 만66세로 고정할 것과 경제부흥이 국민들에게도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년에는 온라인 시위로 진행됐는데 노조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네덜란드 국민이 '만67세까지 일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노조, 고용주 및 정부 3자는 올해 1년 간의 긴 협상 끝에 동의안을 만들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금 기금 보장률이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모아소 행복+ 소비캠페인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는 전체구매 예산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근거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 문의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1670-1030)

장애인 의무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한 "연계 고용제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등)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031-728-7248)

장애인생산물 구매의 모든것



장애인생산물 모아소

검색

독일

죽음의 순간까지 자택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다

독일은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독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20세 이하 인구는 22%에서 18%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5%에서 22%로 증가했다.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8%를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인구 증가에 따라 독일 정부는 노인들의 주거복지 문제와 돌봄·요양 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들이 어떤 주거형태에 거주하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글 성지혜 독일 RBO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독일 노인의 다양한 주거형태

1) 고령자 맞춤형 주거주택으로 개조

주거형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고령자가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자택 거주이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93%가 자기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한다. 이 같은 선호도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고령자 주거에 적합하게 개조할 수 있도록 대출 승인을 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에 적합한 개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대 5만 유로(약 6700만원)를 10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요양보호법에 의해 요양등급을 취득한 자가 거주 편리성을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할

때 사회법전 11권 양호보호법 40조항에 따라 개인당 최대 4000유로(약 54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견적 조사에 의거해 지원금을 취득한 후 실제 발생한 주택개조 비용이 지급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잔여금은 반환해야 한다.

요양등급을 취득한 4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개조할 때는 최대 1만6000유로(220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지원금 제도는 자가 소유자뿐만 아니라 월세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독일 민법 554a조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물리적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자가 소유주에게 주택 개조를 요구할 수 있다.

요양보험회사가 주택개조와 관련된 지원금 신청을 담당하며 관련 정보는 요양·수발 지원센터를 통해 얻을 수

<표> 고령자 적합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건축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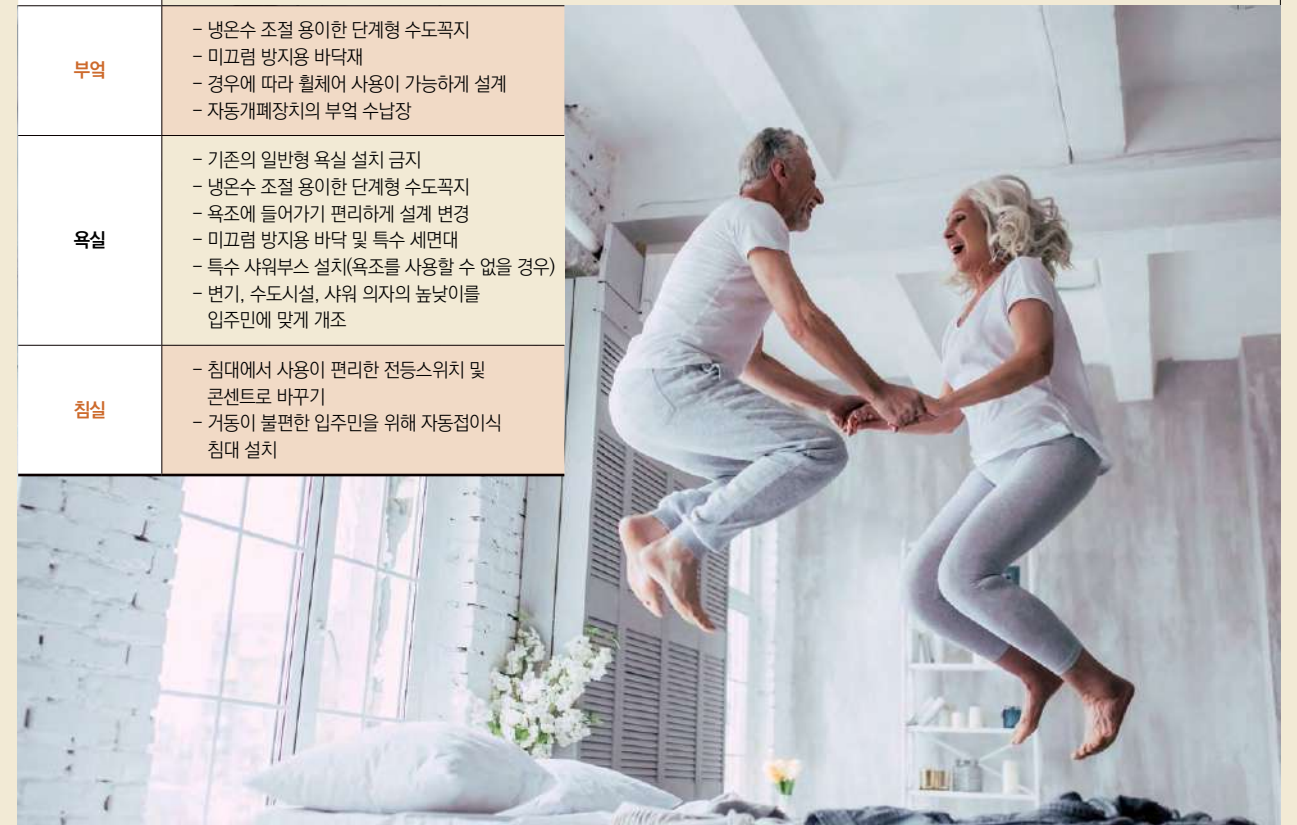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 지면과 같은 높이의 입구, 출입문 확대 및 사용하기 편리한 스위치 높이로 개조 (휠체어 사용자)
계단	- 높이 및 폭 조절 - 난간 손잡이 설치 - 리프트 및 좌식 리프트 설치
중앙현관	- 출입문 크기 확대 - 편리한 시건장치 설치 - 편리한 높이로 우편함 개조 - 저시력자를 위한 눈에 띄는 지번 표시 - 문턱 제거, 자동개폐문 설치 - 인터폰 설치
주거공간 내부	- 욕실 대신 부엌에 세탁기 자리를 설치하여 욕실에서 세탁기로 인한 누수, 누전사고 방지 -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욕실 바닥재 교체 - 안전한 난방설비로 교체 - 전등 스위치, 콘센트 위치를 사용하기 편한 위치로 바꾸기 - 문 크기 확대 및 문지방 턱 제거 - 응급상황을 위한 비상호출벨 설치
부엌	- 냉온수 조절 용이한 단계형 수도꼭지 -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 - 경우에 따라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게 설계 - 자동개폐장치의 부엌 수납장
욕실	- 기존의 일반형 욕실 설치 금지 - 냉온수 조절 용이한 단계형 수도꼭지 - 욕조에 들어가기 편리하게 설계 변경 - 미끄럼 방지용 바닥 및 특수 세면대 - 특수 샤워부스 설치(욕조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변기, 수도시설, 샤워 의자의 높낮이를 입주주민에 맞게 개조
침실	- 침대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전등스위치 및 콘센트로 바꾸기 - 거동이 불편한 입주주민을 위해 자동점이식 침대 설치

있다. 이 기관은 독일 전국의 주요 도시에 설치돼 있으며 요양등급을 취득하기 위한 서류 준비, 환자·가족 상담,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자 적합 주택으로 개조할 수 있는 건축 항목은 <표>와 같다.

2) 노인복지주택 거주

고령자 맞춤형 주택 개조가 용이하지 않거나 요양·돌봄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받고 싶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 거주를 선택할 수 있다. 독일의 각 지방정부에서는 기존의 주택단지를 노인이 거주하기 편리한 곳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TÜV(기술검사협회)의 검사를 통해 할



동에 제약을 받는 거주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한다. 입주인은 최소 60세 이상, 스스로 혹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주택은 방, 발코니, 부엌, 욕실, 지하실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기타 편의시설로 도서관 및 체력단련시설을 갖추고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시내 중심가로 접근이 용이한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병원, 약국, 슈퍼마켓, 은행, 우체국 등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지, 취미활동과 사고를 위한 노인복지관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응급 상황 시 구급차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었는지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담당기관과 연결돼 편리하게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주택이 가진 큰 장점이다. 독일 통계청이 2020년 12월 발표한 돌봄·요양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돌봄·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약 400만명 증가했다. 이들의 상당수가 요양시설이 아닌 독립된 생활공간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조사를 기준으로 독일에는 총 7056개의 노인복지주택단지가 있으며, 이는 2018년보다 약 9.5% 증가한 것이다. 현재 800여 개의



독일 부동산 회사 Gewag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 모습
사진출처 <https://www.gewag.de/extras/betretetes-wohnen/>

주택이 증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급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 노인 전문요양시설 거주

중증질환, 거동불편 등으로 인해 자가 주택 혹은 노인복지주택 거주가 불가능하고, 집중 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대안은 노인 전문요양시설 거주이다. 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 시설 거주 비용은 요양보험회사에서 최대 2005유로(약 270만원)까지 보조한다.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요양시설 거주 평균 비용은 약 3000유로(약 400만원)다. 따라서 요양보험회사가 보조해 주는 비용을 제하고 국민연금과 본인 자산 및 기타 수입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한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대상자가 시설에 입주해야 하는 경우 사회복지청이 전체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수급자에게는 사회복지법 12권 27b항에 따라 거주비용 이외에 기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한 달에 109.08유로(약 15만원)가 지급된다.

노인 전문요양시설은 한 방에 1인 혹은 2인이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지방정부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대다수가 1인실 거주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에서는 2018년 개정된 법에 따라 기존에 지어진 시설은 전체의 80%를 1인실로 제공해야 하며, 새로 짓는 시설은 전부 1인실로 건설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거복지 프로젝트

위에서 언급했듯이 독일 노인들은 시설로 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집에서 여력이 닿는 날까지 생활하고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 이들을 위해서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노년의 삶을 자기 집에서 보내기 위해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



● 독일 노인들은 시설로 가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익숙한 집에서 여력이 닿는 날까지 생활하고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

해 왔고, 현재도 추진 중에 있다. 프로젝트의 비용은 독일 연방 예산 규정 제23조와 44조의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인 지원'에 의거해 지급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Lebens wie gewohnt(기존에 살았던 것처럼 살기)' 역시 과거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부동산 회사, 주택 협동조합 등이 기존의 주택을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에 착수한 시행사는 건물 내·외부의 공간을 고령자 입주인이 이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조한다. 아날로그에 익숙한 노인들이 디지털화된 소통 창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프로젝트 내용에 포함된다. 요양보호사, 담당 주치의, 가족, 노인복지 단체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연결 네트워크를 자택에 설치해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입주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전기자전거를 셰어링 하는 서비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동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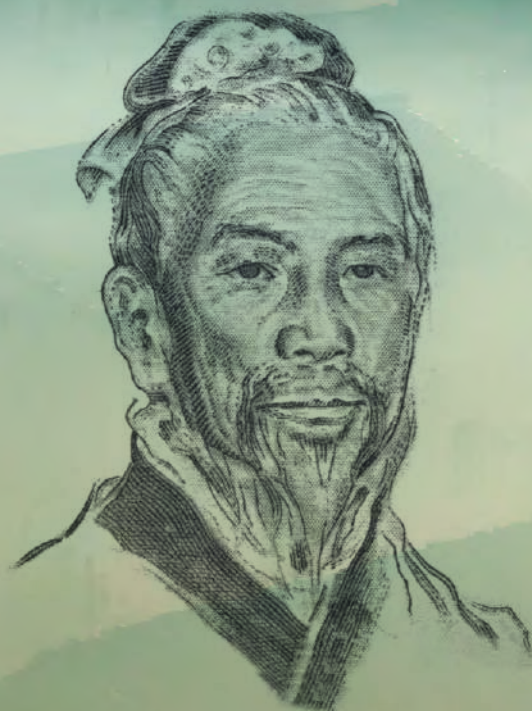
다른 프로그램인 'Sterben, wo man lebt und zu

Hause ist(죽음의 순간까지 집에서 살기)'는 중증의 병에 걸린 고령자가 시설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치료 및 보호를 받으며 자신이 살아왔던 공간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이다. 이 역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며 핵심 내용은 호스피스와 연명치료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인력 확충,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령자 맞춤형 주택으로의 개조, 노인복지주택 건설 활성화, 노인 전문요양시설에서의 1인실 의무화 확대,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기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프로젝트 등은 독일 정부가 노인 주거복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년의 삶에서 주거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은퇴 후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젊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지원정책의 유지·발전과 함께 새로운 대안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㉑



장자의 죽음



장자는 기원전 370년경 태어나 300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 즉 전쟁과 살육, 권모와 술수가 소용돌이치는 불안과 절망의 시대를 살았다. 장자의 고향 송나라(현재 하남성 동부 지역)는 예전부터 사전지(四戰之地)라 하여 사방으로부터 전쟁이 집중되었던 곳이다. 동쪽의 제(齊), 서쪽의 진(秦), 남쪽의 초(楚), 북쪽의 연(燕), 중앙의 한(韓), 위(魏), 조(趙) 나라가 당시 7대 강국이었다. 송나라는 약소국이어서 약자의 비애와 고통, 모욕과 굴욕, 전란과 기아는 그에게 주어진 가혹한 현실이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송나라 사람은 바보의 대명사처럼 불렸다. 장자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다.

장자 사후 약 200년 뒤에 쓰여진 <사기> '장주열전'이 가장 오래된 자료다. 그의 저서는 4세기 광상이 정리한 것으로 내편 7편, 외편 15편, 잡편 11편, 모두 33편이 전해온다. 장자는 무력한 도피주의, 퇴폐적 허무주의, 세속적 염세주의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장자 33편에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오해나 비방을 뛰어넘어, 장자 33편을 통해 나타난 인간의 어리석음, 그 잔혹성에 대한 철저한 응시, 인간 사회 부조리에 대한 예리한 각성, 그리고 인간 역사의 비극성과 허무함에 대한 차분한 응시 등이 장자



사상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장자는 언어표현의 기발함, 사유의 자유스러움, 그 규모의 웅대함에 있어서 독자적인 경지에 있다. 그의 말은 자유분방한 비유와 우화, 신랄한 풍자와 역설, 기묘한 유머와 경구로 가득 찼다.

현대인들은 삶과 죽음을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 삶에만 집착하며 죽음을 한사코 거부한다. 그래서 죽음은 현대인에게 궁극적인 두려움으로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장자는 결코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장자의 중심 용어로는 무위(無爲), 소요(逍遙), 도(道), 무정(無情) 등이 거론되지만, 장자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죽음과의 치열한 대면, 죽음과 삶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계기로 사상을 형성하였다.

<지락(至樂)>편에 제시된 장자와 혜시간의 논쟁은 그의 죽음 이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자의 아내가 죽자 혜시가 문상을 갔더니, 그때 장자는 두 다리를 뻗고 술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이에 혜시가 “아내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같이 키우다가 늙어서 마침내 죽게 되었으니 곡을 하지 않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술동이를 두드리면서까지 노래하는 짓은 좀 심하지 않은가?”라고 힐난하자, 장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아내가 죽었을 당시에야 나라고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그 시원을 돌이켜보면 본래 삶이란 없었다네. 삶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아무런 형체도 없었지. 어떤 형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氣)조차도 본래적으로 없었어. 그저 흐릿하고 어둑어둑한 가운데 뒤섞여있다가 변화가 일어나서 기가 생겨나 변해서 형체가 생겨나고 형체가 변해서 삶이 있게 된다네. 지금 또 다시 변화가 일어나서 아내는 죽게 되었으니, 이는 춘추추동 사계절의 운행과 마찬가지로이지. 아내는 지금 천지라는 커다란 방에 편안히 누워있거늘, 구슬프게 우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통하지 못한 것이란 생각에 곡을 그친 것이라네.”

생사란 바로 기의 변화라는 뜻이다. 기가 모여 삶이 있게 되지만 흩어지면 죽게 되므로, 따라서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게 되고 죽음은 삶의 시작인 것이다. 인간의 삶만이 생사의 변화를 겪는 게 아니라 만물이 생사의 과정 속에 놓여있다.

장자는 또한 <대중사>에서 인간의 생사를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바 있다. 자연은 나에게 형체를 실어주었으니(載我以形), 이는 사계절 가운데 봄에 해당하고, 삶을 얻음에 일을 하게 되니(勞我以生), 이는 봄 다음에 이어지는 여름에 해당하고,

젊었을 때 힘껏 일했기에 늙어서는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佚我以老), 서늘한 가을바람과 관련지을 수 있고, 마침내 삶의 종착역에 이르러 죽음을 맞게 되니(息我以死), 이는 겨울과 연관시킬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사란 계절의 순환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므로, 가을이 겨울로 바뀌는 것처럼 죽음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자연의 변화로 수용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만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겨울로부터 봄으로 이어져 여름과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죽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 삶이 있게 되고 삶이 또 다시 변해서 죽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태어난 것은 이처럼 죽음으로부터 변화되어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다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삶은 죽음과의 이중적 관계 아래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마치 여름(生)이 겨울(死)로부터 봄(形)을 거쳐 성립되었다가 가을(老)을 지나 마침내 겨울(死)로 귀환되는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사계절의 순환이 이어지듯 인간의 삶도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이 다시 삶으로 연계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다.

그러기에 장자는 <열어구>에서 자신의 임종에 직면해서 제자들이 후하게 장례를 지내려 하자 일갈했다. “나는 천지를 관곽(棺槨)으로 삼고 일월을 한 쌍의 옥으로 삼고 만물을 예물로 간주하기에 내 장례식에는 이처럼 갖추어졌거늘 무엇을 덧붙이려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렇게 장례를 지내면 짐승들이 시신을 파먹을까 걱정된다고 말하자 장자는 “땅 위에 두면 까마귀나 소리개의 먹이가 되고 땅속에 묻히면 땅강아지나 개미의 밥이 된다”고 답했다. 자연으로부터 물려받

은 육신이 죽음을 당할 경우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자신의 장례를 올릴 때 장자는 자연에서 안식을 취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물론>에 나오는 여희처럼 삶을 기뻐하는 것이 미혹인 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하는 게 어려서 고향을 떠난 채 돌아갈 길을 잃음인지 모르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 장자는 아내의 죽음을 직면해서 구슬프게 운다면 이는 자연의 흐름에 통하지 못한 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연 변화의 어쩔 수 없음’, ‘그 까닭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다. 따라서 생사란 자연의 변화이므로, 우리는 죽음에 편안히 의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삶이라 해서 좋아할 줄 모르고 죽음이라 해서 싫어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삶을 얻은 것은 그러한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생명을 잃음은 죽음의 시간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생사의 변화에 수순해서 자연의 이법에 순응할진대 그 한가로운 마음에 어떤 감정도 투입할 수 없게 된다. 기의 변화와 자연의 흐름에 따름으로써 음양의 기가 조화를 잃게 되더라도 그 마음은 한가로울 수 있게 되고, 도와 함께하므로 사물의 변화에 얽매이지도 않고 만물을 변화에 맡겨둔 채 자신은 담연하게 근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장자는 말한다.

도가 성인에게 사람의 모습을 부여했으므로, 성인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일반 사람들은 시비(是非), 호오(好惡) 등 감정을 지니고서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되는데, 헤사처럼 시비를 일삼는 것이다. 성인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기는 해도 세상 사람처럼 시비, 호오의 감정으로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결코 없는 것은 그런 감정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장자의 ‘성인무정론(聖人無情論)’은 항상 자연의 원리에 따를 뿐 인위를 보태지 않고 시비다툼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사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사를 한 사코 둘로 나누어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꺼려 하는 식으로, 맹목적으로 삶에만 치우친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성인은 자연스런 흐름에 대해 시시비비 감정을 일으키기보다 생멸하는 자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 생사에 시비를 보태지 않는다.

그래서 장자는 상식적 가치세계의 웅색함, 협소함을 조소하고 세속적인 유용론(有用論) 대신 무용(無用)이 대용(大用)임을 제시한다. 헤사가 <외물>에서 장자에게 “자네 이야기는 실제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다더니, 장자가 반문한다.

“쓸모없음을 알아야 비로소 더불어 쓸모 있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네. 저 땅은 넓고 넓지만, 사람이 쓰는 것은 걸을 때 겨우 발을 밟는 자리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발로 밟는 땅만 남겨두고 나머지 땅을 파내어 황천까지 이르게 한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밟고 있는 땅이 쓸모 있다고 하겠는가?”

“그 땅도 쓸모없게 되지.”
“그러기에 쓸모없음의 쓸모 있음은 분명해지네.”^①

글 오진탁 한림대학교 철학과 교수



영화
〈최악의 하루〉

M O V I E

제 작 사 : 인디스토리
배 급 사 : CGV아트하우스
사진 출처 : 네이버 영화



늦여름 서촌의 어느 날, 배우 지망생 은희(한예리)는 연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길을 잃은 일본인 소설가 료헤이(이와세 료)를 만난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료헤이. 드라마에 출연 중인 남자친구 현오(권율)와의 선약 때문에 그와 헤어진 후 남산으로 가 현오를 만나지만 말다툼 끝에 화를 내고 돌아선다. 같은 시간, 한 때 은희와 잠깐 사귀었던 남자 운철(이희준)은 은희가 올린 SNS 글과 사진을 보고 그녀를 찾아 남산까지 온다. 오늘 처음 본 남자, 지금 만나는 남자 그리고 전에 만났던 남자까지 하루에 세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된 은희. 과연 이 하루의 끝은 해피엔딩일 수 있을까?

‘최악의 하루’ 그 끝은 해피엔딩?



“긴 긴 하루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긴 하루가 끝나갈 무렵, 해가 진 남산 산책로의 한 벤치에 앉아 은희는 연극 대사를 읊조린다. 그녀의 하루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독백. 그녀의 하루는 정녕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 햇살 좋은 날, 서촌과 익선동의 구불구불한 골목들, 그리고 남산에서 은희의 길고 긴 최악의 하루가 펼쳐진다. 그녀의 뒤를 쫓아 걷다 보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서울의 구석구석이 새롭게 다가온다. 은희와 함께 서울을 걸어보자. 항상 지나치던 그곳에서 다른 무엇인가를,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테니. 그녀의 하루 끝에 반전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글 박보희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서촌의 골목길

“익스큐즈미. 하우 두 아이 고우 투 류가혜웅.(실례합니다. 여기 류가현이라는 데가 어디인가요?)”

“류가혜웅?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이게 뭐라고 쓰여있는 거지?”

벽에 붙은 거대한 구릿빛 금속 모형 개미를 멍하니 바라보다 사진을 찍는 은희에게 길을 잃은 일본인 소설가 료헤이가 류가현을 찾아가는 길을 물었다. 일본어와 한국어, 한자와 영어 사이 어디쯤에서 류가현이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첫 만남. 은희는 선뜻 주소가 적인 종이를 받아 들고 앞장서 길을 찾는다.

이렇게 영화는 서촌의 구불구불한 골목 구석구석을 비추며 시작한다. 한 사람이 팔을 펴면 양쪽 벽에 손이 닿을 넓이의 골목길은 기와지붕, 돌담, 빨간 벽돌집, 담쟁이덩굴이 가득한 벽 등 모습을 바꿔가며 화면에 등장한다. 골목길일 뿐이지만 이 골목길이 서촌을 찾는 이유 중 하나다. 경복궁 서쪽에 있어 서촌이라 불리는 이곳은 서울 종로구의 효자동, 필운동 등 15개 동을 아우르는 인왕산 동쪽 동네를 말한다. 경복궁과 청와대 부근이라는 이유로 난개발이 억제된 덕분에 서촌에는 1950~1960년대 지어진





누하동 좁은 골목을 걷다 보면 한국화의 대가 청전 이상범 화백의 옛집이 나온다. 1930년대 도시형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에서는 ‘청전양식’이라는 독창적인 화풍을 만들어 낸 이상범 화백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골목을 걷다 잠시 쉴 곳이 필요할 때가 익선동으로 발길을 돌릴 때다. 익선동 한옥거리를 굽이굽이 걷다 보면, 골목길이 끝날 때쯤, 은희와 료헤이가 커피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둘뿐인 독자 아닌 독자에게 료헤이가 작품을 설명하던 카페 식물이 나온다. 영화 출연 이전부터 이미 독특한 분위기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던 카페로, 카페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시간이 훌쩍 흐르니 주의할 것.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유 미팅 썸원 히어?(약속 있어서 온거 아닌가요?)”
 “예스, 나우 에브리띵 이즈 던. 끝.(취 그런 썸인데...약속은 끝났어요)”
 남산 언덕길을 몇 번이나 오르내리며 두 남자와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낸 은희. 긴 하루의 끝에, 서울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남산 자락 벤치에 한참을 앉아있는데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곤방와(안녕하세요)”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뒤로, 다시 우연히 만난 둘.
 영화는 낮과 밤 서로 다른 남산의 매력을 한껏 보여준다. 낮의 남산은 녹음 사이를 햇살이 반짝이며 쏟아져 내려오는 공간이었다면, 밤의 남산은 도시의 불빛이 저 밑에서 차분하게 반짝이며 올라오는 공간이다.
 한 번도 끝까지 가본 적 없다는 밤의 남산 산책로를 료헤이와 걸으며, 무용을 전공한 은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이날 긴 하루 중 처음으로 거짓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은 은희의 모습. 이를 보며 료헤이는 행복한 결말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우리의 행복한 결말을 떠올리며 오늘 남산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나는 해피엔딩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밤 해피엔딩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주인공은 행복해질 거예요.”[㉠]



여행 길잡이

교통

서울 한복판에 있는 남산담계, 남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럿이다. 그중에서 한 번쯤 타볼 만한 남산케이블카는 명동역 3번 출구에서 600m쯤 올라가면 나오는 탑승장에서 탈 수 있다.

맛집

언제부터였을까, 남산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왕돈가스가 된 것은? 남산에서 명동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에 줄지어 있는 왕돈가스집들은 저마다 한 번씩 방송 출연을 했을 정도. 원조남산왕돈가스(02-755-3370), 101번지남산돈가스(02-777-7929), 남산골 산채집(02-754-1978) 등 맛집에 둘러보자.

도시형 한옥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던 이들이 남긴 자취, 각종 문화공간... 걷기만 해도 좋아

이들이 찾은 류가현 역시 그 옛날 한옥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흐를 류(流) 노래 가(歌) 집 현(軒), 흘러가듯 노래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사진 전문 갤러리로 2010년 3월 서촌 골목 안 한옥을 개조해 문을 열었다. 영화 속에 나온 그 모습이다. 하지만 이후 2016년 12월 지금의 청운동 아카이브 빌딩으로 옮겨 모습을 바꿨다. 조선시대 중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며 살았던 덕에 그 자취는 지금까지 곳곳에 남아 갤러리, 문화 공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료헤이와 은희가 처음 만난 개미가 벽을 기어오르던 건물 역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자인제노다. 료헤이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곳은 갤러리 팔레 드 서울의 옥상 정원. ‘서울의 궁’이라는 의미가 담긴 팔레 드 서울에서는 전시장 곳곳의 창과 문을 통해 예술 작품을 보듯 통의동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옥상정원에서는 검제 정선의 ‘인왕제색도’에서 보이는 인왕산의 모습과 경복궁 경희루 앞마당, 서울 도심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도 있다.





www.bokjimes.com

news

내가 받을 국가보조금,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한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정부24'에 접속해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다.

행정안전부는 4월 28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보조금24 서비스를 정식 개통했다고 밝혔다.

보조금24는 정부 대표 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연령과 가구특성, 복지대상 자격정보를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고, 보조금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혜 대상자별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로 많으며, 지원 형태별로는 현금 지원 171개, 의료지원 일자리·돌봄 등의 서비스 84개, 이용권 27개, 그리고 현물 지원 23개 순이다.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사회 만든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4월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와 가족 생애 주기의 다변화, 가족 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를 반영했으며 정책의 기본 관점을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향은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 확장 △남녀 모두 일하고 돌봄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정책 과제로는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4가지를 마련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안정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대국민 수기 공모전 개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및 노인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대국민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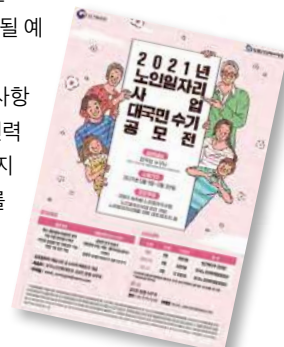
이번 수기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국민이 바라본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미담,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긍정 메시지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2021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관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응모작과 제출서류를 구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모전 운영 사무국 이메일(kordi_seniorjob@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1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과 상금 70만원을,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3명에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상장과 상금 각 50만원, 30만원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발표하고 개별 통보하며, 수상작은 노인일자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콘텐츠로 제작돼 온·오프라인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kordi.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복지 분야 유공자 포상

오랜 기간 장애인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총 68명의 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월 20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 볼룸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변호사로서 자폐성 장애인 권리 보호에 앞장선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정권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대표이사인 국민훈장 목련장을,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및 이동권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큰 박선하 경북지체장애인협회장이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또한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 성지도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양지의 집 원장, 이상용 대전광역시립산성종합복지관장, 강경식 무장애남구를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가 국민포장의 주인공이 됐다.

아울러 송대성 사회복지법인 남해복지재단 대표이사, 석철민 한국농어인협회 광진구수어통역센터장, 오승택 애명다온빌 시설장, 정재우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주사, 이민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청남도협회 청양군지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진소라 엠마우스산업 사무국장, 김민수 수원시 광고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희호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장, 이준오 장애인친구센터몽침회 부회장, 임기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장, 구본교 한국외보조기협회 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열정의 60년, 더 나은 미래로' 인구보건복지협회 60년사 발간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인구보건복지협회 60년사'를 발간했다.

협회는 1961년 4월 1일 설립해 정부의 인구정책을 지원하고, 지자체·경제계·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해 전 사회적으로 저출생 대응 사업을 펼치며, 모자보건사업을 통한 임신·출산·육아 친화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오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60년사는 가족계획 사업의 태동부터 인구변화 대응과 임신·출산·육아 지원에 이르기까지 협회의 60년 역사를 연대기별로 소개하고, 전국에 위치한 13개 시도 지회의 주요 사업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기획특집을 구성해 가정의 붓, 찾아가는 산부인과,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인구교육 등 열정으로 일궈낸 협회의 주요 사업과 협회와 함께한 여러 분야의 관계자 인터뷰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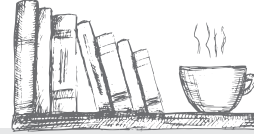
60년사는 협회 홈페이지(pprk.or.kr)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발간사에서 "협회는 그동안 인구변화 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성평등 관점과 일·생활 균형을 지향하며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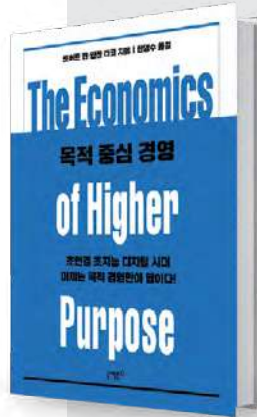
5월의 추천 도서



사회복지 추천 도서

목적 중심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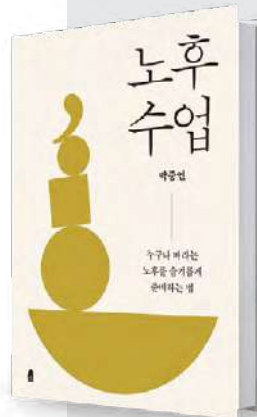
로버트 킨·안잔 타코 지음, 한영수 옮김, 나케박스



신자유주의적 경영 이론을 대체하는 목적 경영의 새로운 원칙을 주창하며, 이를 위해 어떻게 조직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 자세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책이다. 저자 로버트 킨 미시간대학교 로스경영대학원 교수는 조직문화 및 조직행동 분야 전문가이자 세계적인 석학이다. 공저자인 안잔 타코는 올린경영대학 재무학 교수이자 웨스턴파이낸스협회 센터장으로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다. 두 저자는 오랜 연구 끝에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은 '목적'을 향해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으로 점철된 이른바 '뷰카(VUCA) 시대' 환경에서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리인 목적 경영의 작동원리와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탐구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기업은 물론이고, 당장은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업들도 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비즈니스 통찰로 가득하다.

노후 수업

박종언 지음, 휴



노후는 이미 퇴직한 사람이나 5060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에 달해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불안한 시대에 노후는 안락한 삶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다. 이 책은 존엄하고 안전한 노후를 누리기 위한 태도와 방법을 담고 있다. 저자는 노후의 삶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데, 각각의 영역에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와 대비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30대 후반에 일본에서 머무르며 고령화 사회의 실상을 목격한 저자가, 20여 년 동안 노후를 연구하고 자기 삶에서 체계적으로 실천하며 경험한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 지향점은 '자유롭고 건강하며 편안한 나이'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독자에게 스나 이 둘을 제대로 알 것 스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것 스가장 작고 사소한 것부터 행동에 옮길 것을 당부한다.



www.e-ssn.com

◎ 6월 SSN 직무능력향상교육

6월 직무능력향상 교육 과정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화상강의 프로그램 활용)으로 진행됩니다. 교재는 실물교재 없이 pdf 파일로 메일 전송 예정입니다.

구분	과정명	일정	교육비	정원	교육시간
예산회계	후원업무 담당자를 위한 후원금 관리 실무	6.10.(목)	50,000	각 150명	10:00~17:00 (6h)
회계세무	사회복지 회계증빙처리 핵심실무	6.22.(화)	50,000		10:00~17:00 (6h)
인사노무	4대보험 실무	6.24.(목)	50,000		10:00~17:00 (6h)

◎ 6월 SSN 컨소시엄교육

6월 컨소시엄 교육 과정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25인 이하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과정명	일정	교육비	정원	교육시간
행정실무	실무자를 위한 프로포절 작성과 프로그램 기획	6.7.(월)~8.(화)	무료*	25명	09:00~18:00 (2일, 16시간) ※ 중식 및 교재 제공
사회복지	전략적 사회복지 시설운영 및 평가 실무	6.9.(수)~10.(목)		25명	
회계실무	(초급) 복지예산 효율관리	6.14.(월)~15.(화)		25명	
홍보관리	언택트 시대의 홍보 관리	6.21.(월)~22.(화)		25명	

*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교육비 30,000원 납부

- 교육 신청 복지넷(<https://www.bokji.net/>) 가입 후 'ssn교육'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
- 교육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교육연수실
T. 02-2077-3928 F. 02-2077-3948 E. essn@ssnkorea.or.kr



세계상을 바꾸는 청소년



제23회 전국중고생 자원봉사대회

응모방법

- 응모자격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청소년(개인 또는 동아리)
- 응모내용 2019년 7월부터 2021년 5월 말까지 자발적인 봉사활동 사례
- 응모기간 2021년 4월 12일(월) ~ 6월 4일(금) (6월 4일(금)자 우편 발송분 유효)
- 응모방법 대회 홈페이지 상세 내용 참조

시상내역

- 교육부 장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각 2건
- 금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200만원
- 금상 2건 금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200만원
- 은상 30건 은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100만원
- 동상 40건 동메달 및 상장, 장학금 각 50만원 | 장려상 000건 상장 및 부상
- * 금상 이상 수상자는 장학금과는 별도로 100만원을 수상자가 지정하는 비영리기관에 기부 예정 (상세 내용은 수상 이후 별도 개별 안내)
- * 추천 선생님 전원 감사장 및 부상 수여, 응모자 전원 소정의 기념품 증정

